

제4장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제1절 편안하고 안전한 삶터 조성을 위한 주거권 강화

제2절 신기술과 공공의료 강화로 도민 평생 건강보장

제3절 도민의 존엄을 보장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제4절 도민 안전을 책임지는 스마트 재난대응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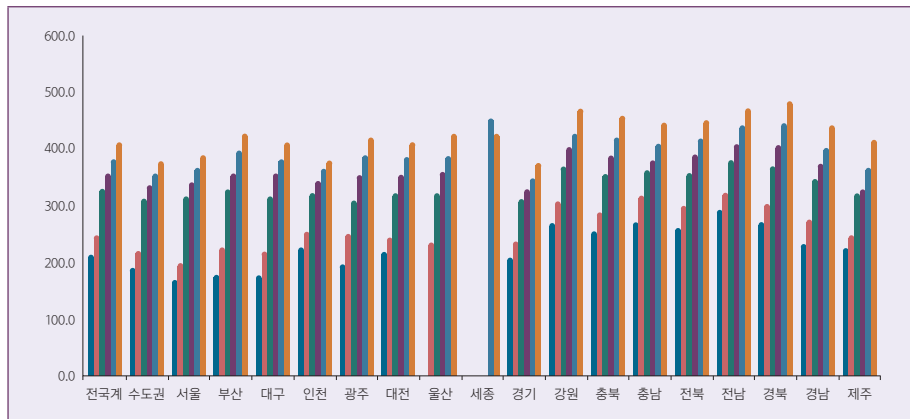
편안하고 안전한 삶터 조성을 위한 주거권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안정적인 주택공급 대비 주택노후화 지속

- 전라남도의 천명당 주택수(통계청자료)는 471.1(호)로 전국 평균 411.6(호)보다 높고, 경북 484.7(호)에 이어 전국 2위 수준으로 전체적인 주택부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
 - 1995년부터 2019년까지 전라남도 천명당 주택수 연평균 증가율은 2.0%로 전국 평균 2.8%를 하회

그림 III-4-1
광역시도별 천명당 주택수
현황



자료 : 통계표 인구천인당 주택수

- 2020년 기준, 도내 주택 중 30년을 경과한 노후주택이 약 28.5(만호)로 확인되고 읍부 5.8(만호), 면부 15.1(만호), 동부 7.5(만호)에 입지하는 등 비도시지역 주택의 노후화가 높은 수준으로 주거문제의 지역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전체 주택을 기준으로 노후주택비율이 높은 지역은 신안(69.6%), 진도(61.0%), 완도(57.2%), 함평(55.6%), 강진(53.8%) 순으로 집계됨

표 III-4-1
전라남도 지역별 주택유형별
30년이상 경과 노후주택수
(단위 : 호)

구분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전라남도	285,171	243,138	30,683	6,031	1,374	3,945
읍부	58,414	50,277	4,301	1,941	695	1,200
면부	151,642	150,018	291	245	108	980
동부	75,115	42,843	26,091	3,845	571	1,765
목포시	21,057	15,277	4,374	699	144	563
여수시	37,105	23,177	12,720	271	205	732
순천시	25,315	18,867	5,101	493	350	504
나주시	16,505	15,240	880	234	X	151
광양시	16,096	7,234	6,195	2,400	63	204
담양군	7,535	7,363	51	24	8	89
곡성군	6,333	6,154	40	77	X	62

구분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구례군	5,161	4,857	64	170	21	49
고흥군	17,863	17,199	86	129	270	179
보성군	9,963	9,615	56	173	44	75
화순군	8,156	7,987	X	96	14	59
장흥군	8,855	8,547	X	197	X	107
강진군	9,275	8,893	85	119	60	118
해남군	15,763	15,269	150	168	5	171
영암군	9,127	8,869	48	94	33	83
무안군	11,520	11,104	98	84	67	167
함평군	8,212	8,070	X	60	9	73
영광군	10,780	9,771	554	339	9	107
장성군	7,554	7,341	24	110	X	79
완도군	12,639	12,257	137	58	6	181
진도군	8,735	8,536	20	36	62	81
신안군	11,622	11,511	X	X	X	111

자료 : 통계표 주택종류 및 노후기간별 주택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U1521&conn_path=I3

-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전라남도 단독주택의 노후화비율은 60.5%이고, 연립주택 36.6%, 비거주용 주택 30.6%, 다세대주택 12.5%, 아파트 8.5%로 확인됨
 - 단독주택 노후화비율은 목포(71.8%), 신안(70.7%), 진도(69.7%), 완도(67.4%), 강진(64.2%) 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아파트 노후화비율은 여수(18.2%), 광양(14.8%), 영광(9.2%) 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연립주택 노후화비율은 광양(80.5%), 구례(67.5%), 나주(48.9%), 목포(43.8%) 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III-4-2
**전라남도 지역별 주택유형별
 30년이상 경과 노후주택수
 비율**

구분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소계	35.6%	60.5%	8.5%	36.6%	12.5%	30.6%
읍부	31.4%	59.5%	5.0%	29.0%	16.0%	31.9%
면부	52.3%	59.5%	0.9%	11.8%	8.8%	31.6%
동부	23.0%	65.5%	10.8%	50.0%	10.6%	29.3%
목포시	22.3%	71.8%	6.4%	43.8%	7.9%	34.4%
여수시	32.6%	60.7%	18.2%	16.2%	12.1%	28.2%
순천시	22.2%	58.5%	6.6%	29.5%	22.7%	27.8%
나주시	30.3%	62.4%	3.1%	48.9%	-	32.5%
광양시	26.6%	52.4%	14.8%	80.5%	7.6%	21.2%

구분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담양군	40.8%	46.7%	2.8%	9.0%	2.9%	26.6%
곡성군	47.0%	53.5%	3.2%	21.8%	-	31.3%
구례군	44.2%	48.4%	5.9%	67.5%	16.0%	24.7%
고흥군	52.3%	61.4%	2.4%	15.5%	21.8%	38.4%
보성군	51.2%	59.3%	2.3%	34.8%	38.3%	39.5%
화순군	28.5%	51.9%	-	33.0%	17.7%	20.1%
장흥군	50.1%	61.2%	-	27.1%	-	35.8%
강진군	53.8%	64.2%	3.9%	21.6%	17.0%	38.3%
해남군	50.3%	62.8%	2.6%	35.5%	2.4%	31.3%
영암군	33.3%	57.8%	0.4%	15.1%	8.4%	28.2%
무안군	32.5%	59.9%	0.6%	17.6%	21.7%	38.3%
함평군	55.6%	61.0%	-	25.0%	8.0%	33.3%
영광군	46.7%	63.2%	9.2%	36.8%	2.9%	28.6%
장성군	40.3%	53.2%	0.6%	22.0%	-	29.0%
완도군	57.2%	67.4%	5.6%	9.4%	1.7%	34.7%
진도군	61.0%	69.7%	1.5%	10.7%	30.8%	38.6%
신안군	69.6%	70.7%	-	-	-	44.8%

자료 : 통계표 주택종류 및 노후기간별 주택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U1521&conn_path=13

📌 자가중심의 주거점유형태 및 현재 다양한 주택유형 분포

- 2019년 기준, 전라남도의 자가보유율은 74.5%로 전국 평균 자가보유율 58.0%보다 상대적으로 주택 보유현상이 높고, 타 지역에 비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소유하는데 부담이 없음
 - 2010년 대비 주택의 자가보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전세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4-3
전국과 전라남도 주택점유
형태 비율

구분	전국						전라남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
2010	54.3	21.7	18.2	2.0	1.3	2.7	70.7	11.7	9.7	1.5	2.0	4.3
2012	53.8	21.8	18.6	2.7	0.3	2.8	69.4	12.3	10.6	1.2	2.3	4.2
2014	53.6	19.6	21.8	1.4	0.7	2.8	69.5	6.3	17.6	1.0	1.3	4.4
2016	56.8	15.5	20.3	2.7	0.7	4.0	73.4	7.8	10.7	2.6	0.5	5.1
2017	57.7	15.2	19.9	2.6	0.8	3.9	74.8	7.3	10.1	2.5	0.7	4.7
2018	57.7	15.2	19.8	3.3	0.0	4.0	74.2	7.5	10.3	3.1	0.0	4.9
2019	58.0	15.1	19.7	3.3	0.0	3.9	74.5	7.4	10.2	3.1	0.0	4.8

- 2020년 기준으로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주택유형은 아파트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는 반면에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주택유형은 단독주택으로 나타남
 -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단독주택은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라남도에서는 증가하고 있음
 - 2015년이후, 주택유형은 아파트의 증가세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표 III-4-4
전국과 전라남도 주택유형별
주택수 변화
(단위 : 천호)

구분	전국					전라남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내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내주택
2000	4,069	5,231	813	453	393	400.6	162.5	12.2	1.7	30.0
2005	3,985	6,627	520	1,164	198	391.0	198.0	12.1	5.0	11.7
2010	3,797	8,185	504	1,246	151	368.6	240.6	11.5	5.0	8.4
2015	3,974	9,806	485	1,898	204	404.9	306.7	14.2	10.0	11.9
2020	3,898	11,662	522	2,231	214	402.0	359.7	16.5	10.9	12.9

자료 : 통계표 총조사 주택총괄 재작성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U0001&conn_path=13)

- 전라남도 읍면동별로 주택유형의 비중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단독주택은 군지역 읍부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반면, 군지역 면부와 시지역의 동부에서는 감소
 - 아파트는 모든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장래 주택의 유형이 아파트로 획일화될 개연성이 있음

표 III-4-5
전라남도 읍면동별
주택유형별 주택수 변화
(단위 : 호)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전남 읍부	총계	120,273	131,678	130,999	167,957	186,168
	단독주택	78,457	80,540	75,400	85,175	84,524
	아파트	27,312	40,395	46,056	69,735	86,833
	연립주택	4,585	5,152	5,737	5,795	6,699
	다세대주택	541	1,647	1,650	3,907	4,340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9,378	3,944	2,156	3,345	3,765
전남 면부	총계	275,170	256,464	249,566	283,343	289,791
	단독주택	254,356	243,065	228,891	253,121	252,134
	아파트	9,957	9,559	16,672	24,571	31,254
	연립주택	1,104	1,047	1,449	1,739	2,071
	다세대주택	224	473	601	1,166	1,226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9,529	2,320	1,953	2,746	3,105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전 라 남 도	총계	211,575	229,544	253,369	296,321	326,084
	단독주택	67,779	67,366	64,276	66,608	65,368
	아파트	125,210	148,042	177,885	212,355	241,597
	연립주택	6,531	5,869	4,311	6,653	7,693
	다세대주택	917	2,825	2,603	4,842	5,389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11,138	5,442	4,294	5,863	6,017

자료 : 통계표 총조사 주택총괄 재작성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U0001&conn_path=13)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독립가구 증가로 개별 주거수요 증대

-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총 인구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 증가로 인해 주택수는 인구감소에 비례하여 감소할 가능성은 다소 낮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1인가구에 대응하는 주거면적, 주택유형, 연령층별 주거수요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2020년 기준으로 전라남도의 1인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총주택수는 239.7(천호) 이고,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단독주택 156.4(천호), 아파트 72.5(천호), 연립주택 3.9(천호) 등으로 집계됨
 - 2015년과 비교결과, 1인가구 거주 주택수는 32.8(천호)가 증가하였고, 이중에서 아파트수가 21.0(천호)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III-4-6
전라남도 1인가구 거주 주택
유형
(단위 : 천호)

구분	2015						2020					
	주택	단독 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기타	주택	단독 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기타
전남	206.9	146.5	51.5	2.8	2.3	27.6	239.7	156.4	72.5	3.9	2.8	21.0
읍부	45.9	31.0	12.0	1.1	0.8	7.5	54.4	33.6	17.2	1.5	1.0	6.5
면부	85.9	81.1	3.6	0.4	0.2	8.2	92.5	85.0	5.9	0.5	0.3	6.0
동부	75.1	34.4	35.9	1.3	1.3	11.9	92.8	37.9	49.4	1.9	1.6	8.5

자료 : 통계표 거처의 종류 및 가구원수별 일반가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05&conn_path=13)

- 연령별로 1인 가구 거주 주택수를 살펴본 결과, 2020년 기준 25세 미만 1인가구 거주 주택수는 13,953(호), 25~64세 1인가구 거주 주택수는 122,877(호), 65~84세 1인가구 거주 주택수는 86,674(호), 85세 이상 1인가구 거주 주택수는 16,192(호)로 집계됨
 - 연령대별로 1인가구 거주 주택유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아파트 거주비율이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서 고령대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5세 미만 1인가구의 경우, 단독주택 거주비율 74.2%, 아파트 거주비율 19.3%로 나타남
 - 85세 이상 1인가구의 경우,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87.5%, 아파트 거주비율이 11.1%로 나타남

표 III-4-7
전라남도 연령별 1인가구
거주 주택유형

(단위 : 호)

구분	2015				2020			
	25세미만	25~64세	65~84세	85세이상	25세미만	25~64세	65~84세	85세이상
가구수	9,967	115,700	81,756	11,441	14,981	136,538	88,715	16,399
주택수	9,215	106,212	80,317	11,203	13,953	122,877	86,674	16,192
단독주택	6,731	61,417	68,254	10,145	10,359	64,679	67,228	14,168
아파트	1,825	38,481	10,330	893	2,699	51,035	16,946	1,792
연립주택	163	1,902	652	78	224	2,500	1,015	127
다세대 주택	231	1,580	446	27	300	1,880	605	49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265	2,832	635	60	371	2,783	880	56

자료 : 통계표 연령 및 거주지 종류별 1인가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L1509&conn_path=3)

📌 단독주택 중심으로 빈집의 비중이 확산되는 추세

- 2020년 기준으로 도내 빈집은 약 122천호로 전체 주택수 대비 1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빈집비율이 높은 편에 속함
 - 총 주택수 대비 빈집비율은 전남(15.2%), 제주(14.2%), 강원(13.1%) 순으로 확인되고, 전국 빈집비율인 8.2%를 상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전국기준으로 아파트 주택유형에서 빈집비율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전라남도의 경우, 단독주택에서의 빈집비중이 아파트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III-4-8
2020년 기준 광역 시도
주택유형별 빈집현황

(단위 : 호)

구분	총주택수	빈집계	빈집비율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전국	18,525,844	1,511,306	8.2%	339,406	829,784	74,371	242,870	24,875
서울	3,015,371	96,629	3.2%	3,508	50,900	5,338	35,485	1,398
부산	1,275,859	113,410	8.9%	15,450	60,018	3,832	32,306	1,804
대구	809,802	39,069	4.8%	5,938	28,355	823	3,057	896
인천	1,032,774	65,861	6.4%	6,997	27,997	2,820	27,049	998
광주	538,275	41,585	7.7%	6,444	30,848	1,368	2,196	729
대전	496,875	26,983	5.4%	3,805	17,901	1,120	3,652	505
울산	394,634	30,241	7.7%	3,457	19,573	1,798	4,692	721
세종	136,887	14,385	10.5%	987	12,487	264	552	95
경기	4,495,115	272,358	6.1%	16,354	153,675	15,512	83,235	3,582
강원	644,023	84,106	13.1%	21,808	51,643	5,680	3,314	1,661
충북	640,256	76,877	12.0%	19,597	47,655	3,341	4,902	1,382
충남	865,008	106,430	12.3%	25,013	62,711	6,393	10,742	1,571
전북	741,221	95,412	12.9%	34,769	50,059	4,030	4,672	1,882
전남	802,043	122,103	15.2%	58,821	55,293	3,266	2,848	1,875
경북	1,094,306	139,770	12.8%	54,463	66,656	6,410	9,526	2,715
경남	1,296,944	150,982	11.6%	53,028	83,747	4,979	6,889	2,339
제주	246,451	35,105	14.2%	8,967	10,266	7,397	7,753	722

자료 : 통계표 빈집의 종류 및 건축연도별 주택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U1512&conn_path=3)

- 2020년 기준으로 도내에서 빈집비율이 가장 높은 시 단위는 나주시로 21.2%, 군 단위는 영암군으로 21.8%로 나타나고 있음
 - 총 주택수 대비 빈집비율이 전라남도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은 나주, 곡성, 구례, 고흥, 화순, 영암, 무안, 영광, 장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단독주택 빈집비율이 높은 지역은 강진과 함평으로 각각 14.2%이고, 목포와 광양이 각각 2.5%와 3.1%로 빈집비율이 낮은 편으로 확인됨
 - 아파트의 경우, 빈집비율이 높은 지역은 영암군과 나주시, 목포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아파트 주택량이 빈집에 포함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표 III-4-9
2020년 기준 전라남도 시군
주택유형별 빈집현황
(단위 : 호)

구분	총주택수	빈집계	빈집비율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전라남도	802,043	122,103	15.2%	58,821	55,293	3,266	2,848	1,875
목포	94,332	13,345	14.1%	2,381	10,001	348	361	254
여수	113,941	14,464	12.7%	5,038	8,500	164	446	316
순천	113,964	14,663	12.9%	4,835	8,751	282	536	259
나주	54,524	11,549	21.2%	4,199	6,871	188	196	95
광양	60,548	8,274	13.7%	1,887	5,517	591	154	125
담양	18,485	2,585	14.0%	2,197	245	18	73	52
곡성	13,488	2,135	15.8%	1,723	266	30	86	30
구례	11,687	1,811	15.5%	1,546	167	51	19	28
고흥	34,150	6,370	18.7%	4,983	893	163	241	90
보성	19,464	2,808	14.4%	2,159	481	114	25	29
화순	28,628	5,257	18.4%	2,886	2,267	41	24	39
장흥	17,679	2,465	13.9%	1,754	381	241	45	44
강진	17,241	3,238	18.8%	2,487	506	135	74	36
해남	31,350	4,492	14.3%	3,169	1,038	119	85	81
영암	27,410	5,981	21.8%	2,286	3,360	159	132	44
무안	35,403	6,856	19.4%	3,699	2,893	76	102	86
함평	14,777	2,366	16.0%	2,096	191	40	11	28
영광	23,083	3,534	15.3%	1,858	1,373	179	66	58
장성	18,761	3,138	16.7%	2,030	958	94	9	47
완도	22,096	3,193	14.5%	2,442	475	127	83	66
진도	14,327	1,904	13.3%	1,619	152	46	55	32
신안	16,705	1,675	10.0%	1,547	7	60	25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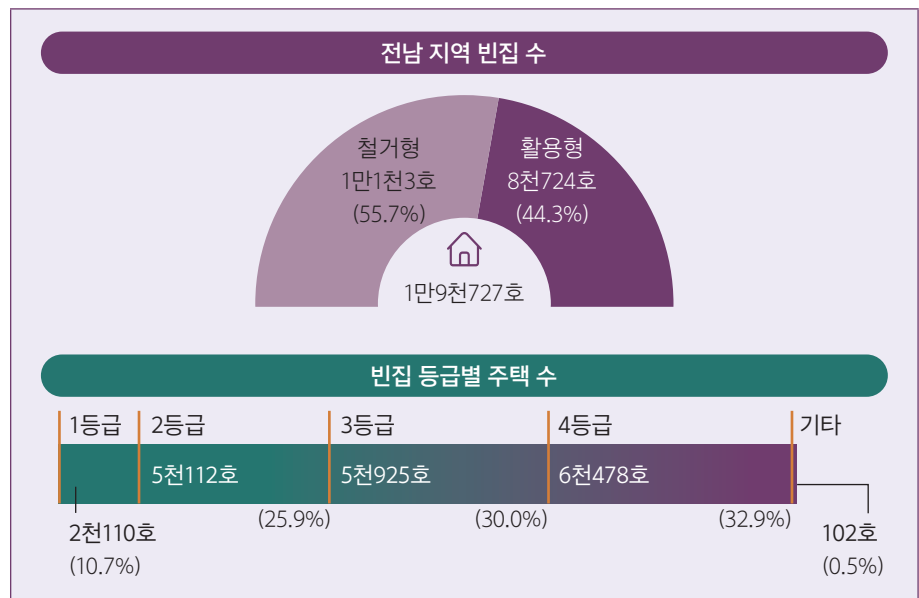
자료 : 통계표 빈집의 종류 및 건축연도별 주택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U1512&conn_path=13)

- 도내 빈집정비 및 활용실태 성과감사 결과, 2021년 12월말 기준 전남지역 빈집은

총 1만9천727호로, 이중 철거형은 1만 1천3호(55.8%), 활용형은 8천724호(44.2%)로 나타남

- 빈집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등급을 분류한 결과, 즉시 거주가 가능한 1등급은 2천110호(10.7%), 주택 상태가 양호한 2등급은 5천112호(25.9%), 상태가 불량한 3등급은 5천925호(30%), 매우 불량한 4등급은 6천478호(32.9%), 기타 102호(0.5%) 등 3~4등급이 전체의 63%를 차지해 도내 빈집의 불량도가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또한 빈집 소유자가 철거와 활용에 동의한 경우는 2천835호로 전체의 14.4%에 불과해 소유자의 철거·활용 부동이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 석면 재질의 슬레이트 구조 빈집이 9천32호나 방치돼 있어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

그림 III-4-2
전라남도 빈집 등급별
유형조사 결과



-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하고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빈집정비계획 미수립 및 빈집조례 정비 노력 부족, 형식적인 빈집실태조사 실시,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노력 미흡, 빈집 활용방안 모색 소홀, 슬레이트 구조 빈집 정비에 소극적 대처, 빈집정비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 노력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 조직, 예산, 인력 등 다양한 정비 인프라 확충,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통한 중·장기적 빈집플랫폼(빈집은행) 구축, 빈집 소유자와 활용자의 이익공유 시스템을 통해 적극적 활용 유도, 도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지역개발사업과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입 촉진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 필요

2. 여건 변화 및 전망

◆ 양적성장에서 주거복지 제고중심의 정책 기조 전환

- 전라남도의 주택공급은 안정적인 상황으로 수도권과 대도시권과는 다르게 주택 공급 부족문제가 주거정책의 주요 이슈에 해당되지 않음
- 주택보급률과 천인당주택수 등의 주택 양적지표에서 전남지역이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주택공급 부문보다는 주택수요를 관리하고 주거복지 수준을 보편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20년 상반기에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 2.0은 주거복지 수혜계층 확대 및 주거복지 수준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음
 - 주거정책의 주요 지향점은 주택가격의 안정과 주거복지 서비스를 수혜받는 계층을 보편화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음

◆ 위드 코로나 시대, 다기능적 주거시설 출현 예상

- covid-19와 같은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주택의 기능은 단순하게 거주하면서 휴식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방역의 기초단위로 역할을 수행
 - 중앙질병관리본부에서는 자가격리를 위해 최소한의 독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주택기능을 강조
- 인간의 교류활동이 점점 감소하면서 그동안 기능별로 재편되어 왔던 시설들이 주택내에서 이루어지고, 기능과 시설이 복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기존의 휴식·식사·수면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근무, 교육, 보육, 여가 등의 기능을 지원하는 다기능 공간으로서 주택의 위상 변화

◆ 기후위기 및 기상이변에 따른 안전한 정주생활 위협 요소 증가

- 지구온난화, 빈번한 태풍발생, 폭염, 미세먼지로 인해 지역민의 생활에 대한 불편 현상 증가 및 안전한 정주생활에 어려움
 - 이상기후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태풍과 집중호우 등에 의한 노후주거 인프라 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매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기후위기와 기상이변에 대응하는 안전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 주택 외부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주택 신기술의 보급으로 에너지, 환경, 생태 등의 기능이 주택내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실외환경 수준 저하 및 외부 안전성이 저하됨에 따라 생태환경요소를 실내에서 체험할 수 있는 주택기술 보급 예상
 - 외부 기후환경에서 파생되어 정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관리하기 위한 주택 기술 발전과 친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안전한 정주생활에 대한 수요 증대 예상

🏠 기후와 환경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에너지효율화 주택 지원 강화 예상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온실가스 저감 및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사업이 진행중
-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그린뉴딜사업을 진행중에 있음. 코로나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비중 있게 추진 중
 - 주요 뉴딜사업중 하나인 그린뉴딜사업은 에너지와 건축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줄이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화석연료를 통해 주택난방, 보일러 가동, 냉온수를 공급하는 사업들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므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및 전환 사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 전라남도 지역내 주택문제 양극화 문제 심화 가능성

- 도시와 비도시지역간, 원도심과 신규 외곽지역간 주거 양극화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노후주택의 경우 면부에서의 노후화율이 동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비도시 지역의 노후주택수 증가 및 관련 주택수준의 저하 등이 주거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도시지역내 원도심지역의 공동화 현상으로 주택 노후화와 멸실주택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외곽지역에서는 신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공동주택이 밀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1인가구의 경우, 도시지역에서는 청년계층의 공동주택형 주거형태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비도시지역에서는 고령자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에서 홀몸어르신의 거주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주거취약계층의 주택유형별 분포현상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이원화되는 과정에 있고,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주거서비스 전달은 도시지역에서 효율성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따라, 비도시지역에서 홀몸어르신을 위한 주거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인구 유출에 따른 주거시설의 관리 저하 및 빈집 출현

- 전라남도의 경우, 자연적인구 감소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구 감소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바 빈집증가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인구유입 대비 전출인구수가 2011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또한, 비도시지역 고령인구 사망으로 거주주택의 이용률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빈집으로 방치되는 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빈집의 증가는 마을 커뮤니티 활력성을 저해하고, 마을의 이미지를 감소시키는 사회적 부의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
- 빈집에 대한 관리와 운영방안을 지자체와 마을중심으로 공동체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향 검토 필요
- 청년계층의 전출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주거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중장년층의 경우에도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주거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 발생
 - 기존 거주 주택을 관리하거나 노후화를 예방하고 개량하기 보다는 신규주택에 대한 주거비 지불부담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기존 주택에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도민의 주거생활을 진단하는 조사체계 선제적 대응 미흡

- 지역민의 주거생활 만족도 제고 및 주거서비스 분야 관련 정책에 대한 도차원의 실태조사 필요
 - 현재 10년단위 주거관련 종합계획 수립시 주거실태조사를 반영하여 주거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매년 국토교통부가 광역자치체별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범위가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작은 수준임
- 전라남도의 경우, 고령자 및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타 지역에 비해 높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자체조사를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중앙정부 차원의 주거실태조사 및 지자체 사회조사로는 도민의 주거수준, 주거서비스 수요를 도출하는데 한계 발생
 - 주거권이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식되는 여건에서 도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민의 주거수요 및 다양한 주거관련 지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

3. 주요 정책과제

1) 기본 목표

- 편안하고 안전한 삶터 조성을 위한 주거권 강화
 - 도민의 정주환경을 제고하고,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인 주거권 강화를 위해 공공지원 서비스를 높이고, 지역민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삶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

2) 추진전략

- 주택의 수준을 높이는 개량·정비 지원체계 강화
 - 현 거주지에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비교적 적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주택의 수준을 질적으로 향상하는 지원방안 마련
 - 비도시지역과 원도심의 주택개량사업과 주민들의 개별 주택개량 등을 연계하여 주택 정비효과를 제고
-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형 주거복지정책 모색
 - 중앙정부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주거관련 정책으로 인한 미스매칭을 감소시키는 지역형 주택공급 및 공공임대주택, 주거복지정책을 발굴하고 구현
 - 중앙정부의 주거관련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자체 주거관련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생산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역형 주거정책 수립
- 노후주택과 빈집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
 - 노후주택과 빈집의 방치를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관리방안 검토
 - 장기 유휴 주거시설에 대한 관리를 소유자에게 부담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대내외 홍보 강화를 통해 부작용 해소
- 기후와 환경, 정주트렌드를 고려한 미래주택 모델 개발
 - 실내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주택의 다기능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미래주택 테스트베드 구축

3) 핵심 프로젝트

🏠 주택의 수준을 높이는 개량 및 정비 지원체계 강화

- 전라남도의 주거현황은 도시와 비도시지역간 주거수준 측면에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인구구조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따른 마을의 소멸로 이어지는 현상 발생
 - 22개 시군에서 30년 이상 경과된 주택 비율이 전체 34%를 상회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읍부와 동부는 각각 31.2%, 19.7%인 반면에 비도시지역인 면부는 51.9%를 차지
- 노후화된 주택을 대상으로 정주민의 주거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원함으로써 마을단위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주거정책 추진
 - 전라남도의 비도시지역의 경우, 도시지역과는 다르게 신규 주택수요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민간개발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주거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그러므로 전라남도의 주거정책은 지역 여건에 따라 민간개발 투자를 통해 신규주택을 조성하는 방안과 주민 스스로 집수리 등 주택 개량·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제도 마련

- 농어촌 지역의 주택개량을 담당하는 공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주거권을 강화하는 정책 추진
 - 지역의 개발사업에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주거수준을 높이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주거의 개량과 정비를 추진하는 공기업의 경영성과 항목에 사회적 공헌활동에 대한 지표와 배점 기준을 높이고, 지역민의 주거수준을 높이는 중앙정부 정책을 위수탁하여 농어촌지역의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제도 도입
- 농어촌 지역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수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건축연령 및 입식부엌, 재래식 화장실 등을 개량하는 주거정비사업 추진
 -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노후주택과 정주민의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시군별로 정비우선구역을 설정하고, 단계적인 주거정비사업 시행
 - 시군의 읍·면 소재지역을 대상으로 정비우선구역을 설정하고, 중심지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주거개량사업을 추진
- 농촌주택개량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빈집의 자발적 철거자를 비롯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항도 농촌 정주기간에 따라 차별화하는 등 세부적인 지원정책 마련
 - 신축·개축과 대수선의 경우 각각 2억원과 1억원으로 대출금을 설정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의 토지매입비용과 건축 원자재비용 상승에 따라 대출원금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 대출상환기간도 현재 20년 상환에서 거주가능 기간을 고려하여 25년~3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지역에 부합하는 주거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남형 주거조사실태를 정례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지역민이 선호하는 주거유형과 개량 방식을 반영한 주거복지 프로그램 추진 전략 마련
 - 국토교통부는 매년 전국단위 주거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주거정책을 위한 참고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나, 전국단위 주거자료 구축으로 인해 전라남도의 표본수 한계 발생
 - 고령계층을 위한 주거정책, 인구감소 현상이 급격하게 나타나는 지역,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을 진단하는 조사자료를 정례적으로 구축하여 다양한 주거정책을 마련하는 근거로 활용

📍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한 지역형 주거복지정책 모색

- 주거복지 정책은 주거환경개선과 더불어 정주권 강화를 위한 주거분야의 중요한 정책임. 2015년 주거기본법 제정에 따라 지역차원의 주거복지 분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주거복지 정책은 주거취약계층을 선별하고,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전라남도의 경우, 고령자 1인가구 및 도시지역 주택임차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마련 정책과 주거바우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전남형 주거복지 정책의 주요방향은 보편적 주거복지 구현, 효율적인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수요계층의 효용성 제고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
 - 보편적 주거복지 구현을 위해서는 주거급여를 통한 주거바우처 공급사업을 확대 추진
 - 효율적인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주거복지센터 구축을 통해 주거복지사업 홍보 및 주거취약계층 선별, 주거복지수혜대상 가구 관리 사업을 추진
 - 전라남도의 가구수요별 주거복지 정책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르신 등을 위한 공공주택과 귀농·귀촌 가구를 위한 사회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서비스에 대응하는 전남형 공공주택사업 추진
- 주거복지 수혜계층을 넓히기 위해서는 현재 주거급여 대상자 범위를 기존 중위소득 45% 수준에서 60%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중요
 - 특히, 전라남도 비도시지역의 주거의 경우 자산소득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주택자를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지자체 차원에서 검토
 - 보편적 주거복지를 통해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는 인구 비율을 증가시키고, 지역민의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 전라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계층을 위해서는 보편적 디자인을 적용한 공공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읍면 중심지 권역에 해당 공공주택을 입주시켜 생활권 환경에 편의시설과 연계하는 공공주택 운영 프로그램 도입
 - 고령자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생활편의시설과 복지센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설의 재배치 사업을 추진하고, 주택 평면 설계에서도 낙상방지, 안전펜스시설 및 문턱제거 등의 설계요소 적용
 - 공공주택 단지내 다양한 시설을 주변 마을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시설의 관리비용을 분담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설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청년 인구의 지역거주성을 강화하고, 타 지역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주거정책 측면에서 주거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광양, 여수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연계된 지역의 경우, 안정적 일자리를 찾아 유입되는 젊은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자녀 출생 및 교육에 대한 기회 때문에 인근 대도시로 이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중앙정부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르면, 주거면적이 비교적 협소한 주택 공급을 통해 물량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바, 지역민 주거선호도에 부합하는 면적이 넓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도내 청년계층의 타지역 유출이 심화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거주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생애주기형 공공주택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
 - 단독가구를 구성할 수 있는 연령대인 20대 가구, 가정을 이루고 자녀 출산을 준비하는 30대 가구, 자녀 연령대가 중·고등교육 수혜자인 40~50대 가구, 자녀가 출가하여 부부가 세대를 구성하는 60~70대 가구, 노령계층인 70대 이상 가구별로 구분하여 생애주기형 공공주택 공급 추진
 - 20대 가구에 대응하는 주택의 경우, 도시 중심지에 입지하면서 세분화된 주거 면적 유형을 공급하고, 세탁실, 회의실, 공동주방 등 커뮤니티 시설이 도입되는 청년주택 공급
 - 30대 가구에 대응하는 주택은 자녀 출산과 양육시설을 지원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자녀출산 시 일부 임대료의 감면혜택을 주는 주거복지 정책 추진
 - 40~50대 가구를 위한 주택은 자녀의 성장을 감안하여 국민규모주택 이상의 중형주택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정책 추진
 - 60대 이상의 가구에서는 상호 도우면서 생활할 수 있는 개념을 적용하고, 주택 평면 설계 방향은 보편적 디자인 등을 도입하는 주택 공급

◆ 노후주택과 빈집정비를 제고하는 정책 추진

- 전라남도의 경우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이 평균 34.1%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군지역에서 이를 상회하는 비율을 보이고 있음. 전체 주택의 60%이상이 30년이상 노후된 주택으로 구성된 지역은 신안군(69.6%)과 진도군(62.0%)으로 조사됨
 - 노후주택 개선을 위한 주택개량사업의 국고지원이 필요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노후주택 개량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노후주택 설계도서 지원 및 감리작업 지원 추진
- 주택의 경우, 전체 철거를 통한 정비방식과 일부 리모델링을 통해 개량하는 방식 등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마을건축사 제도 지정을 통해 노후 주택 정비를 보다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전체 철거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시 거처를 지원하여 공사기간 동안 지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마을 건축사제도 등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방식으로 주택을 철거하고 정비
 - 주택 리모델링 방식은 단열과 부엌, 내부 인테리어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식과 주택의 안전을 위해 주택설비를 개량하는 방식으로 세분할 수 있고, 관련 수요 조사를 통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3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철거방식과 리모델링 방식에 대해서 지역주거실태 조사 등을 연계하여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상속주택과 빈집주택 세제 제도 도입 검토를 통해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택 관리방식 효율성 제고
 - 농어촌지역에서 빈집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상속 이후, 상속자가 주택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해당 주택에서 생활하지 않아 빈집으로 방치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임

- 빈집의 경우, 언젠가는 돌아가서 정주가 가능한 주택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높으나 시간의 경과속에서 관리 되지 않는 주택의 경우, 귀향하여 생활하는 거처로 생각하기 보다는 무관심속에서 주택이 방치되어 상속받은 사람이 정주하기 어려운 주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 일본, 캐나다, 영국의 일부지역에서는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빈집에 대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소유자에 대한 관리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빈집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스스로 관리하는 방안을 독려하기 위해 세제상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식도 검토
- 빈집에 대한 관리와 시장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상속자)가 스스로 빈집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제도를 도입하고, 빈집을 정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경감하는 제도 추진
- 빈집과 노후주택 철거를 통해 마을내 다기능 주거시설을 마련하고, 지역내 생활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 추진
 - 빈집의 경우, 주택을 철거하고 나대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마을내 주차공간, 공동 농기계 보관시설, 포켓화단, 포켓쉼터 등을 조성하여 마을 지역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도입 사업 추진
 - 공공 주도의 빈집재생정책을 위해 읍면 중심지활성화 사업에 해당 지역의 빈집을 지자체가 매입하여 귀농귀촌 가구를 대상으로 주변시세의 반값주택으로 제공하고, 철거이후 일반 나대지를 활용하여 소규모 주민운동시설 설치공간을 조성

그림 III-4-3
빈집철거 이후 마을쉼터 활용 사례



-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노후주택과 빈집현황 자료를 축적하고, 빈집진행 가능성과 빈집의 공간적 위치, 빈집에 대한 주택특성 및 활용여부 등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마련
 -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 지자체별 빈집관리 현황 및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여 과학기반 증거중심의 빈집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노후주택과 빈집에 대한 다양한 속성정보(위치, 면적, 활용가능성, 철거가능성, 마을중심지간 이격거리) 등을 구축하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 빈집과 노후주택의 문제를 해당 주택의 소유자문제로 국한하기 보다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연계하여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추진체계 구축
 - 마을공동체 사업과의 협업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빈집 관리·활용사업을 제안하고, 빈집관련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사업 추진체계 마련

-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활용하여, 농어촌지역의 노후주택과 빈집을 개보수·정비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 이를 위해서는 노후주택 및 빈집 개보수사업과 관련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이들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독려

◈ 미래 트렌드에 대응하는 미래주택 모델 개발

-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미래 트렌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예측이 가능함. 우선 기후 위기 트렌드를 반영하여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절감형 주택의 중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고 고령가구에 대응하는 스마트홈 기술이 접목되는 첨단기술 응집형 주택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전라남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이를 위해 건물분야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를 저감하는 정책들을 추진중에 있음. 건물분야에서는 탄소를 저감하기 위해 에너지절감형 주택을 보급하는 정책을 추진
 - 에너지 패시브 주택 건축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지자체 차원의 에너지기금 적립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 시·군별로 신규 에너지 전환 마을을 시범적으로 조성

그림 III-4-4
에너지 패시브 주택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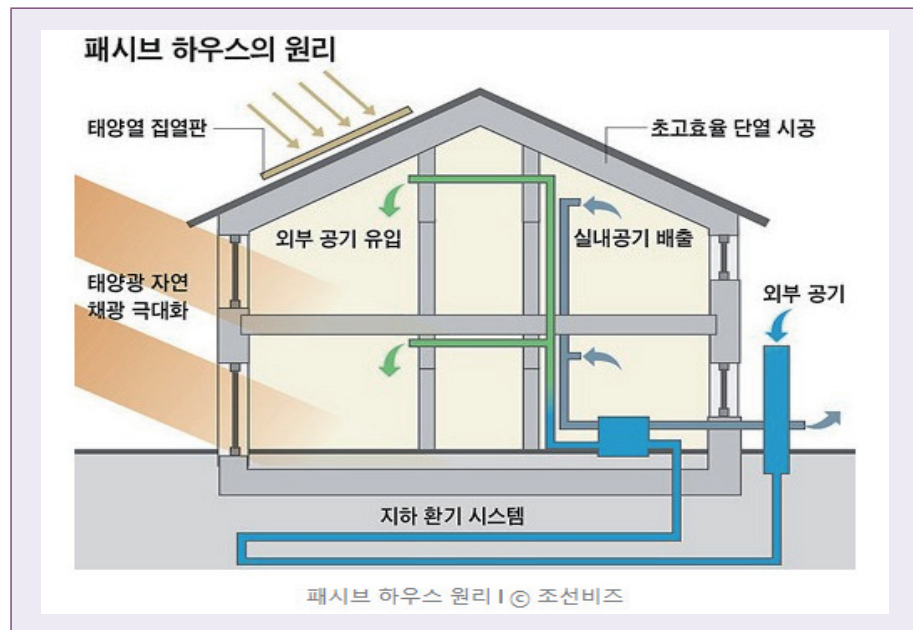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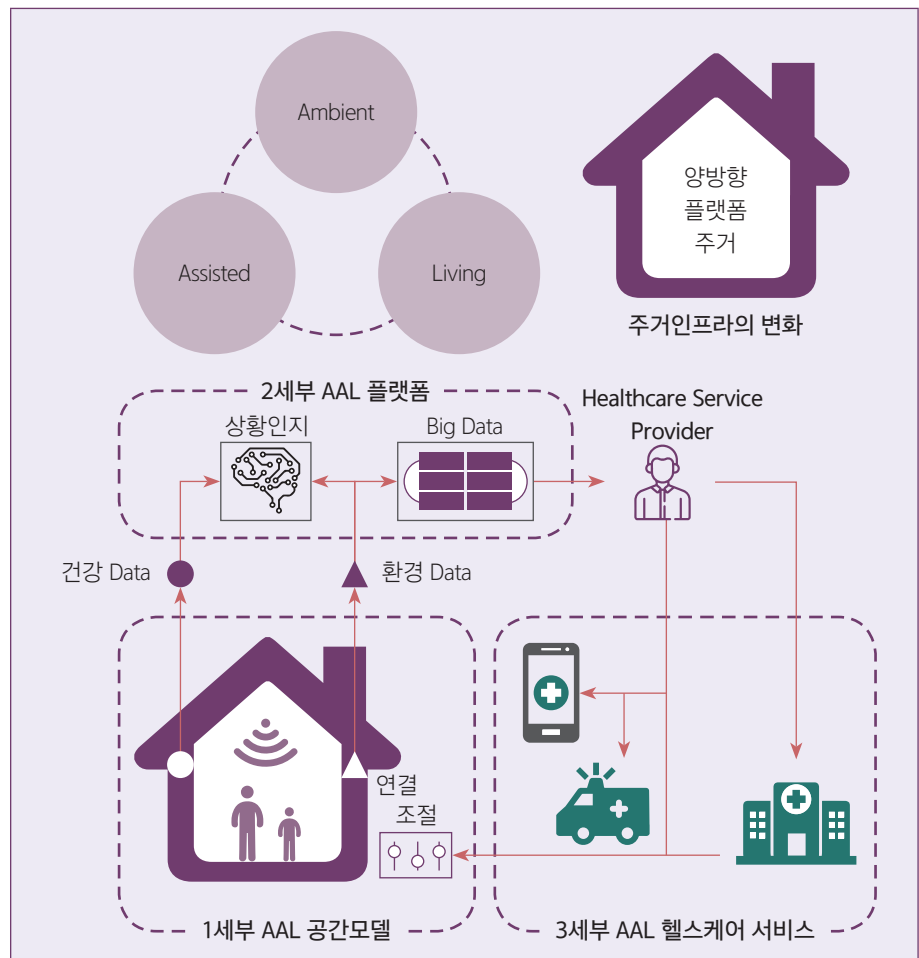


그림 III-4-5
에너지 주거단지 사례
(독일 비스마르크)



- 고령가구의 경우, 혼자서 생활하는 고령층의 건강패턴을 인식하여 안전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완비된 미래 헬스케어 주택 등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본격적인 헬스케어 주택이 도입되기 전 단계에서 노령자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반영하는 건축기술 주택 시범 조성
- 농어촌지역 의료기관과 생활편의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강관련 기술이 접목된 첨단기술주택을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주택에서 수집되는 노령 가구의 다양한 데이터를 접목하여 안전하게 생활하고 거주하는 고령자 평면주택을 설계하는데 활용
- 포스트 코로나 이후, 녹색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부상하는 가운데 주택내부와 외부에 녹색자원을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그림 III-4-6
헬스케어 주택단지 개념도



- 코로나 이후, 친환경자원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근린생활권 내에서 녹색자원의 접근성이 주거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주거만족도 결정요인으로 필(必)환경자원인 녹색자원 체험 빈도가 많을수록 주택에서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싱가포르 사례와 같이 건축물의 입면녹화, 녹색자원을 건물내 주요 건축요소로 적용할 경우 용적률을 높이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시범 적용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

그림 III-4-7
그린빌딩 사례(싱가포르 사례)



신기술과 공공의료 강화로 도민 평생 건강보장

1. 현황과 문제점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 가중 심화

- 전라남도의 2019년 전체 진료비는 4조 5,046억 원으로 2006년(1조 1,840억원) 대비 무려 280% 증가
 - 이중 60세 이상 연령의 진료비는 2006년 5,500억 원에서 2019년 2조 8,485억 원으로 약 5.1배 증가
 - 전체 진료비 중 60세 이상 연령대의 진료비 비중은 2006년 46.9%에서 2019년 63.2%로 2006년 대비 약 34.8% 증가
 - 아울러 만성질환에 따른 진료비는 2006년 2,827억 원에서 2019년 1조 2,561억 원으로 약 4.5배 증가
 - 전체 진료비 중 만성질환에 따른 진료비는 2006년 23.9%였으나, 2019년 27.9%로 4.0%p 증가

표 III-4-10
전라남도 진료비 증가 추이

(단위 : 천원, %)

구분	진료비	60세 이상 진료비 (전체 진료비 중 비율)	만성질환 진료비 (전체 진료비 중 비율)
2006	1,184,011,735 (100.0%)	554,964,751 (46.9%)	282,664,345 (23.9%)
2018	4,145,923,154 (100.0%)	2,591,614,316 (62.5%)	1,163,040,496 (28.1%)
2019	4,504,670,854 (100.0%)	2,848,550,091 (63.2%)	1,256,080,585 (27.9%)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 연도별, 재구성.

주1 :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 치주질환, 관절염, 정신질환, 전염병, 간질환을 포함

주2 : 진료비는 약국을 포함한 금액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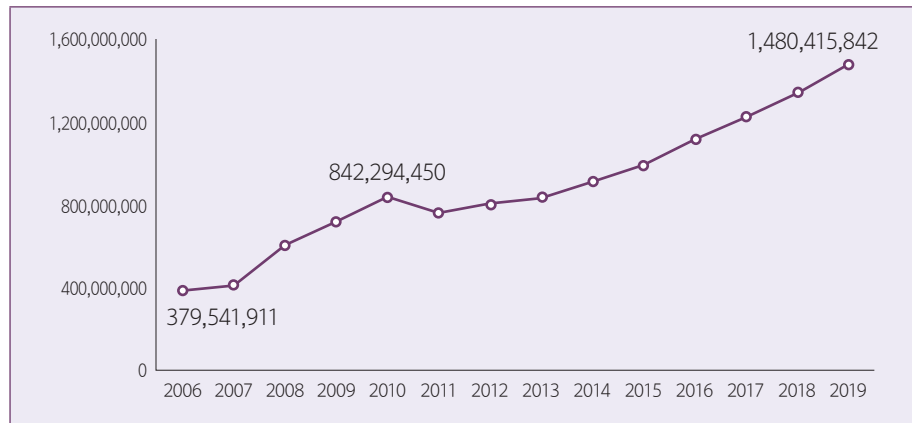
의료자원의 접근성, 의료인력 등의 격차 심화

- 도내 의료기관은 2019년 기준⁸⁾ 2,030개소로, 2009년 1,677개소보다 353개소 증가했으나, 이중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등 5개 지자체에서만 228개소(전체 증가 353개소의 64.6%)가 증가함
 - 무안군은 같은 기간 중 57개소에서 88개소로 31개소 증가하여 군 지역 중 유일하게 증가했는데, 이는 남약신도시 개발 등의 영향으로 보여짐
 - 고흥군, 보성군, 장성군 등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의 비율이 30%가 넘어 심각한 고령화 지역은 의료기관 수가 미미하게 증가하였으나, 요양병원과 한의원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의료기관의 수급 불균형의 문제 및 응급상황에의 대처할 수 있는 의료자원에 대한 불균형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음
- 의료기관 종사 의료인력은 2009년 16,588명에서 2019년 28,415명으로 11,827명(2009년 대비 71.3%) 증가함

8) 2020년 전라남도 통계연보

- 이 중 의사인력은 2009년 2,377명에서 2019년 3,131명으로 754명이 증가했으나, 전체 의료기관 종사 인력 중 의사의 비율은 2009년 14.3%에서 2019년 11.0%로 오히려 감소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등 5개 지역에서만 의사인력 384명 증가(전체 의사 증가의 51% 차지)함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은 2009년 9,905명에서 2018년 16,960명(간호사 8,541명, 간호조무사 8,419명)으로 2009년 대비 71.2%(7,055명) 증가함
- 이처럼 지역내 의료자원의 불균형, 접근성, 의료인력 등의 격차로 인해 전남도민의 관외 진료비는 2006년 3,795억 원에서 2019년 1조 4,804억 원으로 약 3.9배 증가함

그림 III-4-8
전라남도 관외 진료비 증가 추이
(단위 : 명, 천원)



주1 : 진료비는 약국을 포함한 금액으로 의료급여도 포함됨
 주2 : 지역 이동에 의한 지역별 중복값이 있을 수 있어 시군구 하위 합계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 연도별, 재구성

📍 응급의료 인프라 부족에 따른 응급상황 대처의 한계

- 2019년 12월 기준 전라남도의 권역응급의료센터 2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3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33개소, 응급의료기관외의 응급실 운영기관 12개소 등 총 50개소의 응급의료기관이 운영중에 있음
- 한편, 2019년 기준 발병후 응급실 도착 소요시간이 30분 미만인 환자는 전체의 10% 내외⁹⁾에 불과해 여전히 응급상황발생에의 대응 상황은 미흡함
 - 응급실 도착 소요시간은 도내 응급의료기관의 충분성과 무관하지 않음

표 III-4-11
전라남도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외 응급실 운영
기관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권역응급 의료센터	지역응급 의료센터	지역응급 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외의 응급실 운영기관
전국	521	38	124	240	119
전라남도	50	2	3	33	12

자료 : 보건복지부, 「2019년도 응급의료 통계연보」, p.33.
 주1 :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에 의해 각각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의미함
 주2 : 응급의료기관 외 응급실 운영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응급실 운영기관 또는 야간응급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을 의미함

- 한편, 권역외상센터 및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전국 20개소 중 전라남도에는 권역외상센터 1개소만이 운영되고 있음

표 III-4-12
전라남도 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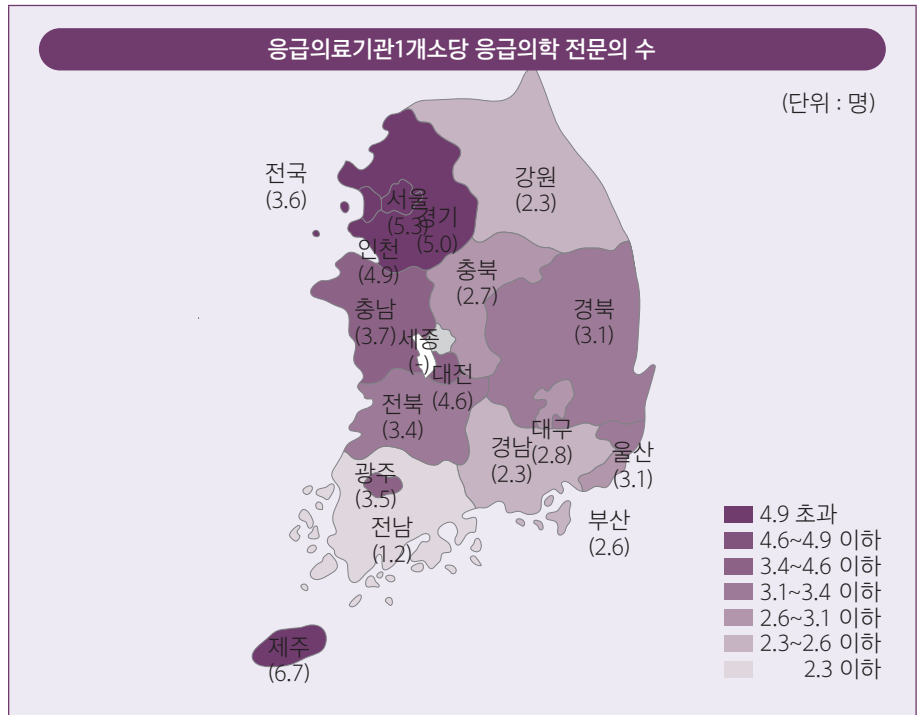
구분	계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선정	지정	선정	지정
전국	20	3	14	-	3
전라남도	1	-	1	-	-

자료 : 보건복지부, 「2019년도 응급의료 통계연보」, p.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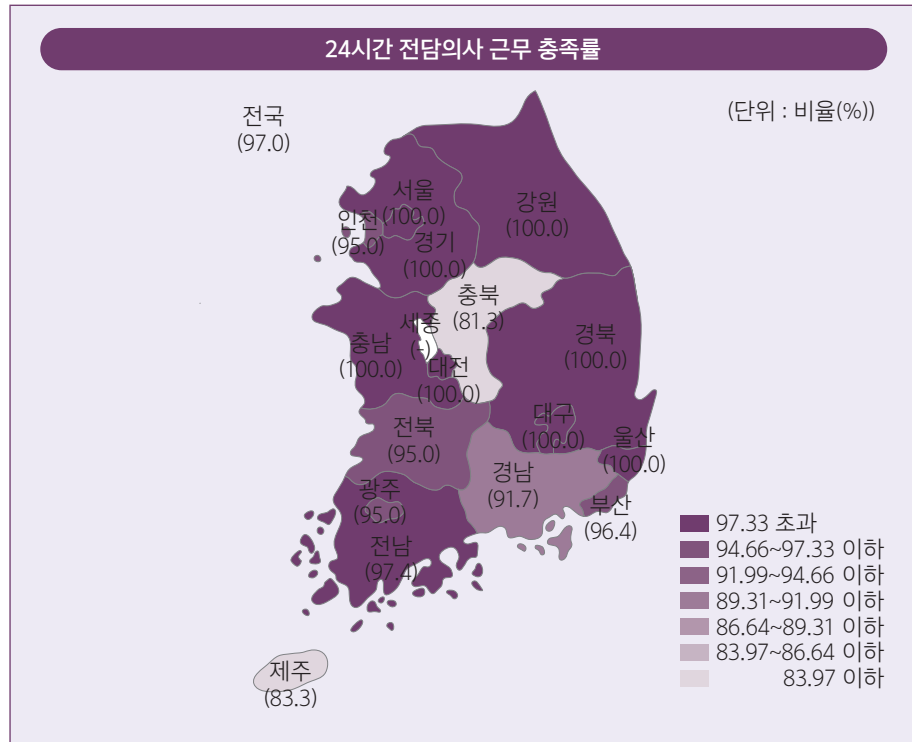
- 주1: 권역외상센터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외상환자의 응급의료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급 이상에서 지정한 기관
- 주2: 전문응급의료센터란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 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급 이상의 응급의료 기관에서 분야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
- 주3: 선정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전문센터 설치지원 사업의 지정조건에 충족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심사를 거쳐 해당 전문센터 지정서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해진 기관
- 주4: 지정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정조건에 충족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운영을 허가하는 지정서를 받은 기관

- 지역내 응급의학전문의 수는 2019년 12월 말 기준 30명으로, 인구십만명당 응급 의학 전문의수는 1.6명에 불과함¹⁰⁾
 - 전국 평균 인구십만명당 응급의학 전문의 수는 3.9명인데 반해 전라남도는 1.6명으로 큰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2014년과 비교할 때 0.1명 증가에 그쳐 전국 16개 시도 중 전라남도의 증가폭이 가장 낮음
 - 아울러 응급의료기관 1개소당 응급의학 전문의 수 역시 전국 평균 3.6개명인데 반해, 전라남도는 1.2명으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를 기록

그림 III-4-9
전국 시도별 응급의학 전문의
및 전담의사 근무 총족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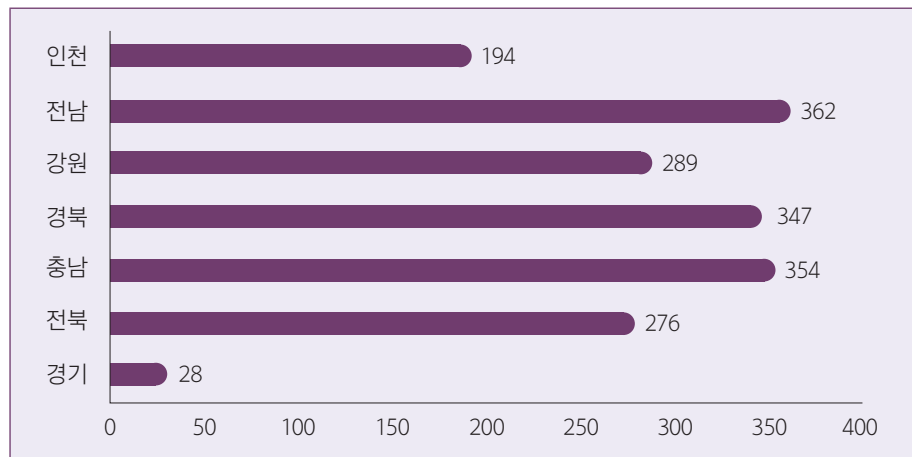
10) 보건복지부, 「2019년도 응급의료 통계연보」, p.26.



자료 : 보건복지부, 「2019년도 응급의료 통계연보」, p.6.

- 2019년 기준 도내 응급실 이용자수는 528,945명 중 60세 이상인 도민은 174,718명으로, 전체 응급실 이용자의 33.0%에 달함
- 전국적으로 응급의료 전용헬기¹¹⁾의 출동건수는 총 1,850건이며, 이중 전라남도도는 362건으로 전체 출동건수의 약 20%를 차지함

그림 III-4-10
전국 응급의료 전용헬기 출동 현황(2019년)



자료 : 보건복지부, 「2019년도 응급의료 통계연보」, p.8.

11)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인천, 전남, 강원, 경북, 충남, 전북, 경기 등 7개 시도에서 운영 중

◆ 감염병 등 위기상황 대응 인프라의 절대적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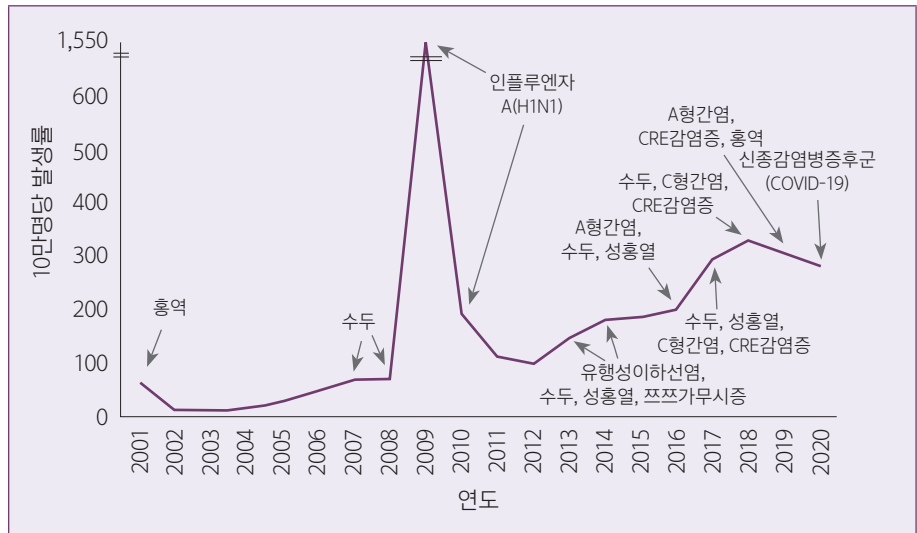
- 감염병 감시연보¹²⁾에 따르면 2020년 법정감염병 신고 환자수는 145,966명으로 인구십만명당 281.6명에 해당함
 - 지난 1960년 인구십만명당 143.4명에서 2020년 281.6명으로 크게 증가함

표 III-4-13
인구십만명당 법정감염병 발생률 추이(1960~2020)

연도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10만명당 발생률	143.4	94.9	21.5	14.6	93.9	192.4	114.6	101.3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0만명당 발생률	148.4	181.0	185.7	201.5	295.5	329.1	307.7	281.6

자료 :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2021.8.13.)

그림 III-4-11
인구십만명당 감염병 발생 추이 및 주요원인(01~19)



자료 :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2021.8.13.)

- 국외유입 감염병은 2010년 이후 매년 400~700명 내외로 신고 되고 있었으나, 2020년에는 5,495명이 신고 되어 2019년(755명) 대비 627.8% 증가함
 - 2020년에 신고된 주요 국외유입 감염병은 신종감염병증후군(97.9%)이고, 일부 Dengue열(0.8%), 말라리아(0.5%), 세균성이질(0.2%) 등의 순임
 - 주요 유입 지역은 아시아 지역(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등)이 전체의 약 33.2%를 차지하고, 그 외 아메리카, 유럽 지역이 각각 30.0%, 26.1%로 나타남
- 전라남도의 법정감염병 발생현황은 2003년 1773명이었으나, 2009년 신종감염병 증후군(신종플루)의 영향으로 24,509명까지 증가했고, 이후 다소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9년과 2020년 COVID-19의 대유행의 영향으로 다시 증가함
 - 2014년부터는 2종 전염병으로 분류된 유행성이하선염과 수두의 급증으로 법정감염병 발생이 크게 한번 증가했고, 이후 2020년에는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해 다시 한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I-4-14
전라남도 법정감염병 발생
추이('03~'20)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감염병 발생	1,773	1,951	2,359	2,557	2,589	2,178	24,509	3,387	3,104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감염병 발생	3,754	2,268	3,770	4,027	3,507	4,320	4,849	4,036	5,674

자료 : 국가통계포털, 감염병 발생현황, 질병관리청, 2020 감염병 감시연보. 재구성

- 그러나 2020년 6월 기준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¹³⁾은 전국적으로 39개 병원 244개 병상이며, 특히 전라남도는 국립목포병원 10개 병상에 불과함

표 III-4-15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
현황(2020.6월 기준)

연번	사·도	병원명	음압		일반격리		비고
			1인실	다인실 (인실*개수)	1인실	다인실 (인실*개수)	
1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4	5*3	1	2*4 3*1 6*5	
2		서울대병원	7	-	-	5*2	
3		서울의료원	10	-	-		
4		중앙대병원	4	-	-		
5		한일병원	3	-	-		
		서울아산병원	9				
		고대구로병원	5				
		삼육서울병원	5				
6	경기	국군수도병원	8	-	-		
7		명지병원	11	2*2	1	5*3 4*1	
8		분당서울대병원	14	-	-		
		고려대안산병원	5				
9	인천	인천시의료원	7	-	-		
10		인하대병원	7	-	-		
11		가천대길병원	5	-	-		
12	강원	강릉의료원	1	2*2	-	5*4	
13		강원대병원	6	-	-		
14	대전	충남대병원	8	-	-		
		건양대병원	5				
15	충북	충북대병원	6	3*2	-	5*5	
16	충남	단국대천안병원	7	-	3	3*5	
		아산충무병원	5				

13) 음압격리병상이란 음압격리구역 내 감염병 환자가 입원하는 전실과 화장실을 포함한 병실을 의미함. 병실내부는 지속적인 음압이 유지되며, 화장실은 병실에서 직접진입이 가능하고, 샤워실이 설치되어야 함, 이때 병실의 기압을 복도보다 낮게 설정하여 공기의 흐름이 복도에서 병실로 흐르도록 해야 함

연번	시·도	병원명	음압		일반격리		비고
			1인실	다인실 (인실*개수)	1인실	다인실 (인실*개수)	
17	전북	전북대병원	9	4*1	6	5*1	
18		원광대병원	3	-	-		
19	광주	전남대병원	7	-	-	2*2 4*4	
20		조선대병원	5	-	-		
21	전남	국립목포병원	2	4*2	-	4*10	
22	경북	동국대경주병원	1	2*2	-	7*4 5*1	
23	대구	대구의료원	1	2*2	-	2*2 3*6	
24		경북대병원	5	-	-		
		칠곡경북대병원	5				
25	울산	울산대병원	9	-	2	2*3 6*2	
26	경남	경상대병원	1	2*3	-	4*3 5*3	
		마산의료원	7				
		창원경상대병원	5				
27	부산	부산대병원	5	-	-	4*4 5*1	
28		부산시의료원	5	-	-		
		삼육부산병원	5				
29	제주	제주대병원	7	2*1	-	2*4	
실 총계			224	20(57)	13		
			244(281)		93(337)		

자료 : 질병관리본부(2019),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사업 대상 의료기관(2020.5)

📍 도서지역 주민 대상 의료서비스의 한계

- 전라남도의 11개 시군 166개 도서 중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지역은 31개 도서이고, 나머지 135개는 무의도서임
- 무의도서 거주 주민의 의료 진료를 위해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으나, 병원선의 노후화로 인해 병원선 내에서의 진료과목과 서비스 수준 등은 한계가 있음
 - 2척의 병원선(동부원 전남 511호, 서부권 512호)에 의사 6명, 간호사 6명, 의료기사 4명, 선박직 11명, 기타 2명이 승선함
 - 진료과목은 의과, 한방과, 치과 등 3개 과를 운영하고 있으나, 단순 진료 이상의 방문진료, 원격의료 등을 통해 질병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수준의 병원선 현대화 필요

◈ 보건소, 보건지소 시설 노후화

- 농어촌, 도서 지역의 주된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인 보건소, 보건지소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주민 건강증진 사업 추진에 한계로 작용
 - 검사장비 노후화 이외에도 누수 등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 등으로 인해 지역민의 보건소(보건지소) 이용 만족도 저하
 - 특히, COVID-19 상황에서 농어촌 지역에서의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인력부족,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서비스 품질 개선에 어려움 발생

2. 여건 변화 및 전망

◈ 4차 산업혁명과 감염병 위험 증대에 따른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대 전망

- 정부는 COVID-19 팬데믹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원격의료¹⁴⁾를 정규 의료서비스로 편제하기 위한 방안 모색 중
 -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원격진료의 법적·구조적 문제, 환자 안전성, 적정 진료 여부 등을 이유로 계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해왔음
 - 그러나 정부는 원격의료 테스트 사업 수행을 위해 강원도를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는 등 원격의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 또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도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을 통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병원 구축, 취약계층 대상 디지털 돌봄,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등에 대해 발표함
 - 디지털 기반 스마트 병원은 5G·IoT 등 디지털기술을 도입해 입원환자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의료기관간 협진 등을 가능하게 함
 - 디지털 돌봄은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에 IoT 센서, AI 스피커 등을 보급해 맥박, 혈당, 활동 등을 감지하게 하는 서비스 체계임

◈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공공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 및 의과전문대학원 학생을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있지만, 미달되는 상황
 - 공중보건장학생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1인당 등록금 1200만원,

14) 의료법 제34조에서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

- 생활비 840만원 등 연간 2,040만원씩의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해당 기간만큼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제도로 2019년 재도입됨
- 연간 20명 선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년 연속 미달인 상황
- 한편, 최근 COVID-19의 장기화로 인해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보건의료대학의 설치, 의대정원 확대 등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 전라남도 블루바이오 전략으로 바이오 메디컬 허브 강력 추진

- 전라남도는 블루 바이오 프로젝트 성공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해 바이오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2030 바이오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함
 - ‘2030 바이오산업 육성전략’은 메디컬 자원과 융합해 지속가능한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허브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로, 의약·농생명·해양 바이오를 포괄한 7개 전략사업, 54개 핵심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특히, 7개 전략사업 중 백신·헬스케어 비즈니스 거점 구축, 면역세포치료 첨단 생태계 구축,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조성 등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보건·의료 기술 향상에 이바지할 계획을 수립함
 - 백신·헬스케어 비즈니스 거점 구축 : 최근 초고령화와 ‘COVID-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글로벌 백신시장 확대에 따라, 국내 유일의 화순백신산업특구를 중심으로 백신R&D부터 임상, 제품화, 인허가로 이어진 전주기 백신·헬스케어 국가 거점 완성
 - 전면역세포치료 첨단 생태계 구축 : 화순백신산업특구에 유치 추진 중인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사업(과기부, 460억원)’을 중심으로 난치성 특이질환(암, 치매 등) 면역치료 원천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R&D와 인프라를 확충하여 연간 165조원의 세계 시장 선점
 -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조성 : 전라남도의 풍부한 바이오, 메디컬 자원을 융합한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오는 2022년까지 유치. 특히 의료의약·치유를 연계한 의료휴양 복합서비스 플랫폼과 AI, 방사광기속기 등을 활용한 스마트 헬스케어 원천기술 등에 역량 집중

◈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강력한 실천의지

- 전라남도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장기 추진과제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취약계층 건강 안전망 확보 등을 선정함
 -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 : 필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및 건강 위해 환경 개선으로 도민이 안전한 보건의료환경 조성 등 체제 구축
 -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 기존의 치료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전환, 지역사회 중심 예방 및 건강관리 내실화로 건강수준 향상
 - 취약계층 건강안전망 확보 : 건강 취약계층에게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통한 효율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수준 향상

전략	성과지표	구분	목표치	가중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강화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수(누계)	결과지표	10개소	10%
	응급의료전용헬기환자 이송건수	결과지표	350건	10%
	결핵 신환자율 감소	결과지표	69.6명	15%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통합적 건강 관리	걷기 운동 실천율	결과지표	40%	10%
	암검진 수검률	결과지표	51%	15%
	암환자 의료비지원	결과지표	9,690 백만원	10%
취약계층 건강 안전망 확보	치매환자 관리율	결과지표	50%	10%
	자살률 감소	결과지표	14.9명	10%
	방문건강관리 집중관리군 등록가구수	결과지표	750가구	10%

자료 : 전라남도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p.87.

3. 주요 정책과제

1) 기본목표

◈ 공공의료 강화로 도민 평생 건강보장 실현

- 고령인구의 급증에 따른 의료욕구의 증대, 만성질환의 고착화, 고급의료에 대한 선호, 보장성 확대 등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음
- 아울러 COVID-19 등의 위기 상황과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따라서 단일 건강보험체계에 따른 데이터 집적, ICT 선도적 위치 등의 국가적 강점을 활용해 전라남도의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질적 제고와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임

2) 추진전략

◈ ICT 기술기반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접근성의 한계 극복

- 보건·의료 분야는 물리적, 디지털, 생물학적 시스템을 병합하므로 4차 산업혁명에서 큰 잠재력이 있는 분야로 꼽힘

- 과거 정보기술(IT) 등 여러 산업 영역에서 개발된 보건분야의 신기술이 COVID-19로 인해 원격 및 비대면 서비스 산업 개발로 이뤄지면서 디지털헬스케어의 급격한 확대 예상
- 인공지능(AI), 빅데이터분석,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가상·증강현실, 웨어러블 기기, 로봇, 블록체인 등 다양한 첨단 융복합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진단, 예방, 예측, 환자 중심으로 의료 패러다임 급변
- 이미 스마트폰 및 웨어러블 피트니스 기기와 같은 소비자 기술이 확대됨에 따라 건강 및 피트니스에 대한 세부적 데이터 수집 기술이 상용화되어 개인의 의료뿐 아니라 의학 연구분야에서의 변형 가능성도 확대될 전망
 - 헬스케어 분야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표 키워드는 모바일 헬스케어 등 디지털 헬스케어로, 과거에는 헬스케어 서비스 대상자가 환자나 고령인구 위주였으나, 향후 전 국민으로 확대될 전망
 - 고령화의 가속화와 만성질환자 수 증가에 따른 공공 및 개인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헬스케어 산업 전반의 효율성과 효과성 개선을 위한 임상 적용 확대 필요
 - 특히, COVID-19 상황의 장기화, 세계적 팬데믹 상황 등으로 인해 그동안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원격진료 서비스(비대면 진료)가 제도화 될 전망
 - 이에 도서, 농산어촌 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의료서비스 이용 편리성 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의료격차 완화

- 도내 농어촌 지역 등은 수익성이 낮아 수도권과 대도시로 의료자원이 집중화되고 필수의료 서비스의 공백이 커지고, 이에 따라 사망률 등 건강 수준의 격차도 커지고 있는 상황
 - 특히 감염병, 공중보건위기 대응 등에 대한 지자체 역할은 커지고 있으나, 전라남도의 공중보건의 부족,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등 필수의료 인력 등 공공의료 인프라는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
 - 따라서 2019년 12월 출범한 전남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활용하여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보편적·필수적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 도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의 역할과 기능 강화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전 생애에 걸친 예방적 건강투자체계 강화

- 우리나라 사망, 질병, 장애의 주요 원인이 비감염성 질환, 즉 만성질환에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갈수록 커지고, 개인의 삶의 질에도 현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과거의 건강증진 전략 패러다임은 진단과 치료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서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서비스 강화로 전환되고 있음

- 전라남도는 노인인구 비율이 월등히 높고, 의료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예방이나 선제적 대응보다는 여전히 진단과 치료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음
- 향후 의료, 임신 및 출산, 아동의 발달 단계별 환경, 개인의 생활습관 등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을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배우고 일하고 즐기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건강관리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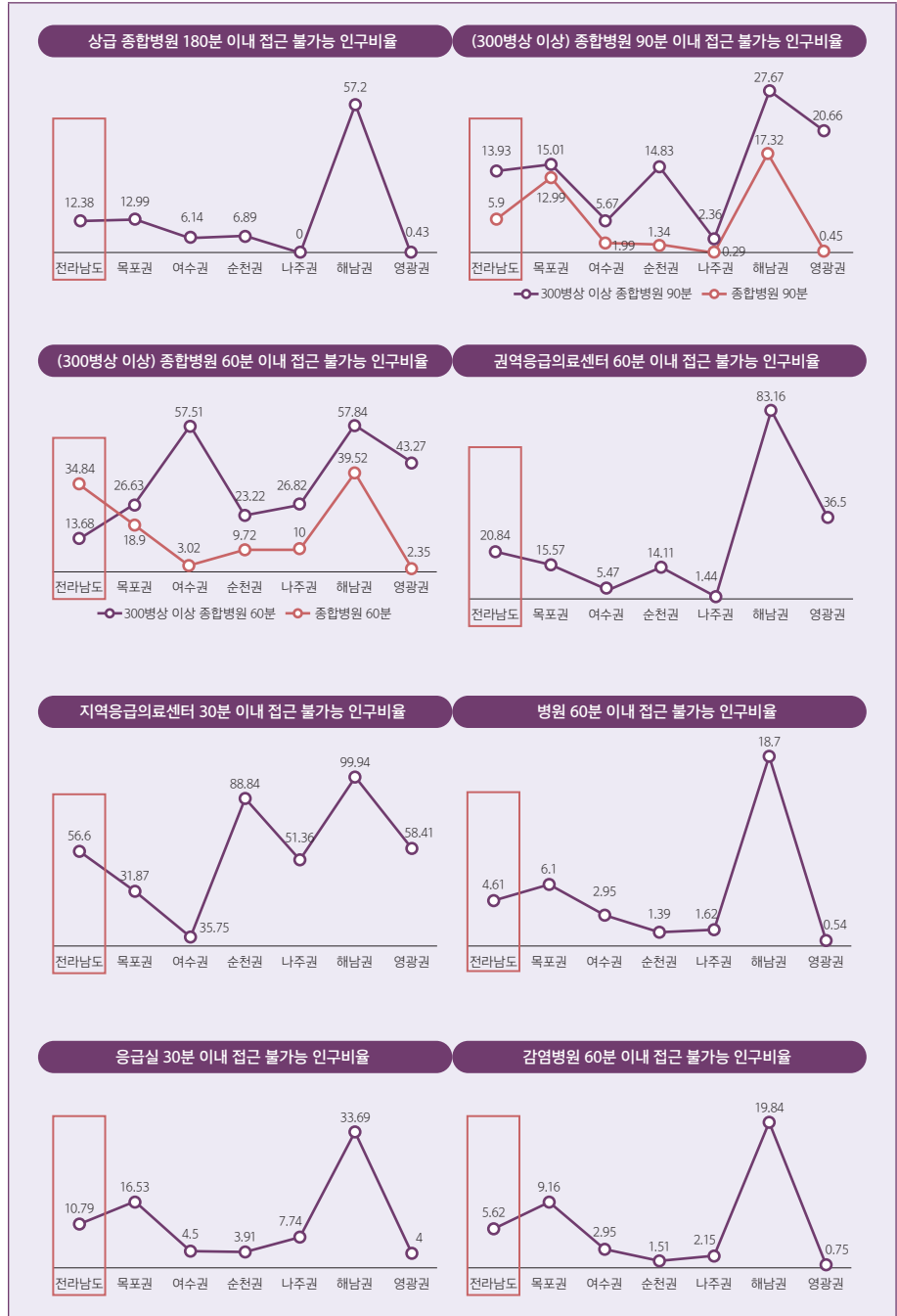
3) 핵심 프로젝트

◈ 전남형 공공의료 플랫폼 구축

-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 인프라 확보 및 국가 공공보건의료 정책 선제적 대응 강화
 - 넓은 면적과 산림지역, 도서지역 등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물리적 접근성이 낮고, 의료서비스 공급 자원의 시군간 격차 증가로 인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의료 취약지역의 건강 불평등 최소화
 - 공공보건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포괄케어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보건소, 보건지소의 노후시설 개선 및 공중보건의를 활용해 노령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 체계 강화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과의 연계를 통해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전용 헬기(닥터헬기), 지역암센터,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등의 확대 전략 수립
 - 지역간호사제 도입, 지역 대학 간호학과 등과 연계를 통해 공공병원 간호사 인력 충원을 강화하고, 근무 여건 등을 개선
-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통한 공공보건의료계획 지원 및 연계 강화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 기관과의 협력 사업 수행
 -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술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 공공보건의료 근무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및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해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 체계 개선 강화
- 지역진료권 간 의료자원 및 의료 질 차이 개선
 - 도서, 농어촌 등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 극복을 위해 구급차, 병원선, 헬기 등 연계망 구축 및 활용방안 마련, 수요 발생시 대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지침 마련
 - 위급 상황시 적시에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자체-민간 의료기관간 통합연계할 수 있는 조직 구성
 - 시군 1차의료기관 활용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의료 자원 재배치 방안 마련

- 지역진료권 및 시군별 특성에 맞는 의료 환경 구축을 위한 지자체별 (원인별) 연령표준화 사망률, 중증환자(심뇌질환, 응급외상) 사망률 분석과 진료권 및 시군별 의료자원에 기반한 지역민 건강증진 정책 마련

그림 III-4-13
전라남도 진료권별 의료현황



자료 :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전라남도 진료권 분석(2020년)」

- 커뮤니티케어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구축
 - 지역사회 내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은 3차 의료기관까지의 연계·협조를 통해 공공의료 중심 의료전달체계 거점 기관의 역할 수행
 - 지역사회 통합돌봄-보건소-지방의료원-대학병원으로 이어지는 공공의료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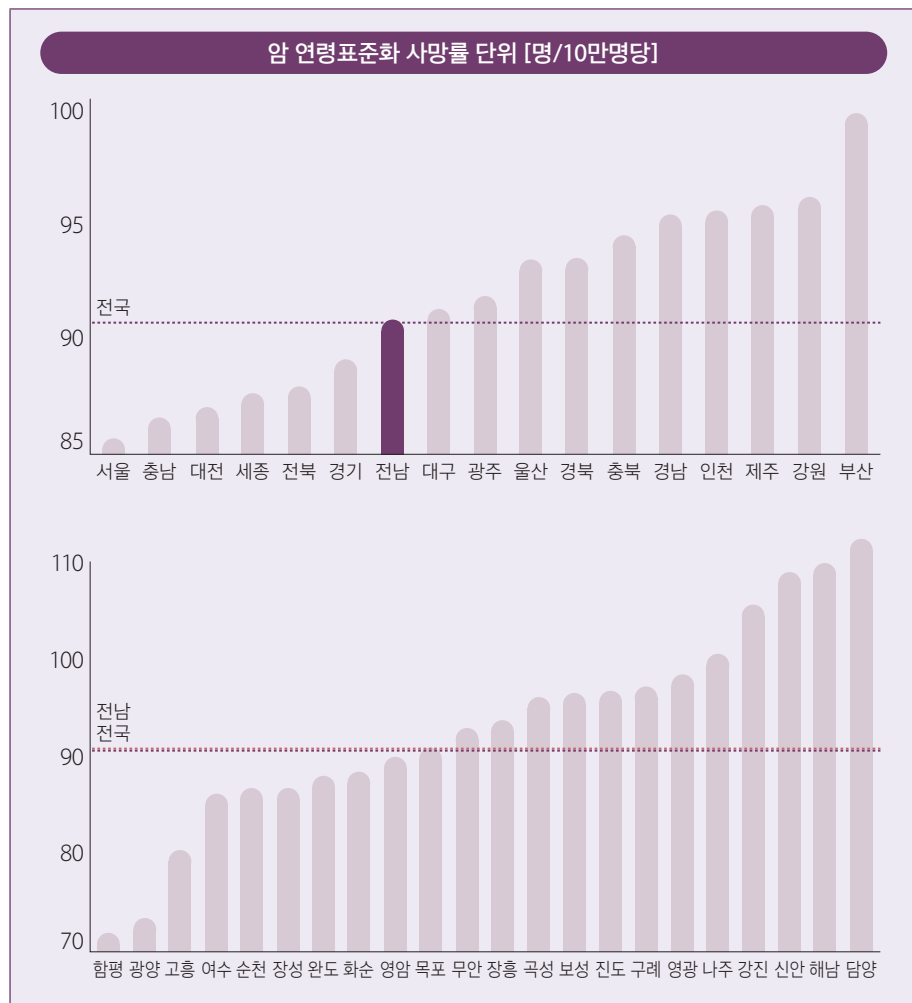
체계 구축으로 보건소를 기점으로 지역사회와 의료기관 양방향으로 원활한 기능 수행 촉진

- 이를 위해 지방의료원 등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 지역거점 공공병원과 3차 병원 연계, 1차 의료와의 분담 등을 담은 전달체계 마련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강화

- 암검진 활성화 및 사후관리 강화 전략 마련
 - 전라남도 사망원인 1위인 암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발생의 예방(1차 예방)과 함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2차 예방) 강화를 위해 국가 암검진사업 및 지역암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암 예방 및 검진 홍보, 농어촌·도서지역 이동검진 확대를 통한 암검진 접근성 제고 강화

그림 III-4-14
암연령표준화 사망률



자료 :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암 연령표준화 사망률

-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통해 암 검진 유소견자의 적극적 발굴, 조기 치료 독려 및 의료기관 연계 강화, 보건소 등록을 통한 암 진료비 지원으로 완치율 향상

- 재가암환자 등록관리 사업 강화를 통한 정기적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자조모임 운영, 호스피스 연계, 소모품 지원 등 서비스 제공 확대
- 전남대학병원, 광주전남지역암센터 등의 연계·협력을 통해 암생존자 통합지지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만성질환관리, 생활습관, 2차암 검진교육 등), 운동, 직업 및 사회복귀 상담 등 통합서비스 제공, 암생존자 관리 전문인력 교육 등 실시로 사후관리 강화

표 III-4-16
전라남도 시군별 암검진
수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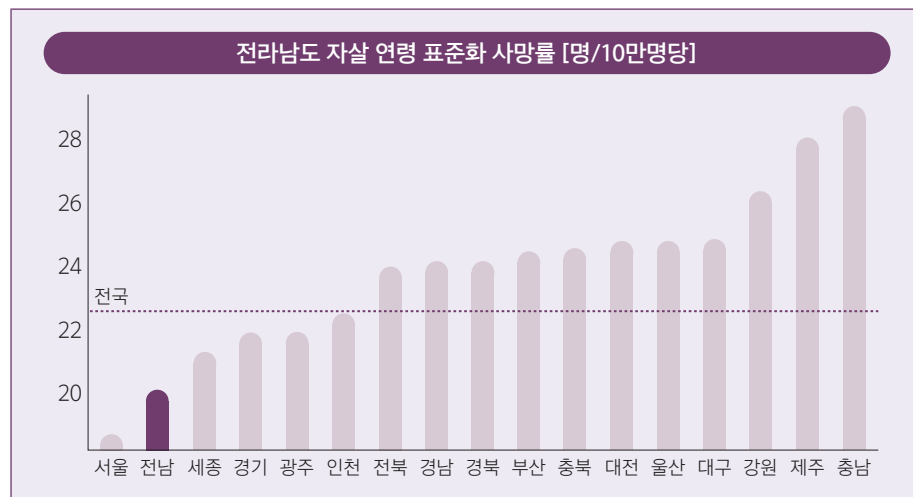
구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전국	50.1	43.5	48.3	50.4	55.8
전라남도	55.3	48.8	53.5	55.0	57.7
목포시	54.2	51.6	55.8	55.9	60.6
여수시	53.5	49.1	55.2	56.8	59.8
순천시	57.2	52.1	56.4	58.0	61.6
나주시	58.1	49.7	52.9	56.3	57.9
광양시	52.3	47.2	51.5	52.5	56.3
담양군	56.5	48.9	52.0	57.9	56.2
곡성군	53.2	45.1	51.8	56.8	59.5
구례군	58.3	49.4	54.4	54.1	56.5
고흥군	54.8	45.0	52.5	54.0	52.9
보성군	54.2	49.5	50.7	53.4	51.9
화순군	54.9	48.6	58.7	59.0	60.6
장흥군	53.3	47.1	51.6	52.4	55.7
강진군	55.4	50.1	50.3	53.9	51.7
해남군	56.5	48.2	52.8	52.8	55.9
영암군	52.0	47.1	55.5	54.4	58.7
무안군	58.5	48.5	52.4	53.1	55.5
함평군	57.9	44.8	48.5	51.7	55.0
영광군	50.7	47.0	47.1	52.1	56.0
장성군	59.6	50.7	54.6	53.4	56.6
완도군	57.0	44.8	47.8	50.4	52.0
진도군	57.1	42.7	50.7	51.5	54.3
신안군	58.0	47.5	50.8	49.9	5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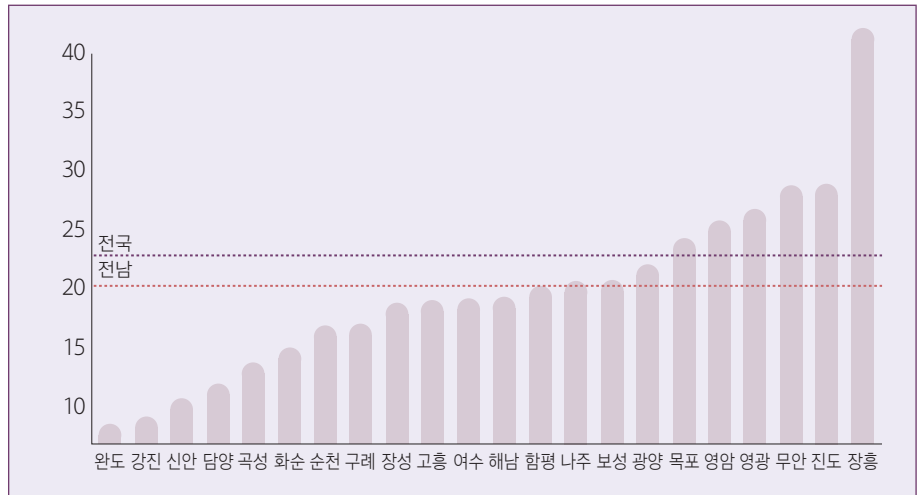
자료 : 국가통계포털, 시군구별 연령표준화 암발생률

- 도민의 만성질환 사전 예방 강화와 건강증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체계 구축
 - 전라남도 단일질환 주요사망원인 1, 2위인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의 질병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형질환인 고혈압·당뇨병의 조기 발견 및 관리 강화
 - 보건소 기반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록 관리사업 추진 및 교육 강화, 혈압·당뇨병 자가관리 프로그램 확대 운영, 일반인 건강지도자 양성·활용 사업 등 추진

- 당뇨합병증 예방을 위한 안검사, 신기능 검사 지원, 심뇌혈관질환 및 뇌졸중 조기 증상 홍보 강화 등
-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구축 강화
 - 노인, 장애인, 고령장애인 증가로 장기요양 및 재가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변화로 도민 전체의 건강위협 위해요인으로 작용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및 지원 실시,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검진 인력 지원 강화, 호남권역재활병원 및 전남권역재활병원간 연계 협력 체계 구축으로 장애인에 대한 공공의료 전달체계 강화
 -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피해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하절기 및 동절기 응급실 감시체계 강화, 생활관리사, 방문간호사 등을 활용한 취약계층 1:1 모니터링 및 수요 맞춤형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 제공, 방문건강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 맞춤형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 지역 영양관리 시스템 강화
 - 1인 가구, 노인가구 등 영양관리 취약계층의 증가로 인해 과체중, 만성질환 등 개인의 삶의 질 역시 저하되는 상황
 - 생애주기별(영유아,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영양교육, 건강식생활 환경 조성, ICT 기반 모바일 영양상담 등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 실천 유도
- 지역사회 정신건강 돌봄 체계 강화
 - 도내 자살에 의한 사망은 1996년 인구십만명당 13.3명에서 2019년 20.1명으로 증가함
 - 자살 예방을 위한 광역 및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역량강화, 정신재활시설 운영 내실화, 민간협의체 구성 운영 등 통합적·체계적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강화 필요성 증대
 -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으로 지속적·체계적 지원 및 관리 실시, 중증정신질환자의 체계적 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로의 복귀 지원
 - 청소년, 대학생, 지역주민, 노인 등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다양화
 -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등 자살예방 환경 조성

그림 III-4-15
자살 연령표준화 사망률





자료 :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자살 연령표준화 사망률(인구10만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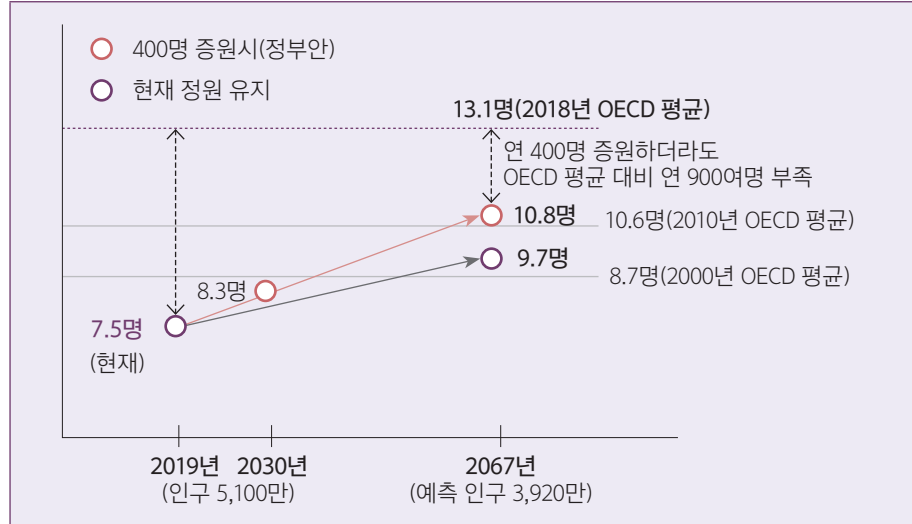
전남권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 전남권 의대 신설로 공공의료 인프라 및 의료 인력 확보
 -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통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의사 증원¹⁵⁾을 계획하고 있으나, 정부안대로 연 400명 증원하더라도 2067년 우리나라 의대 졸업자 수는 2018년 기준의 OECD 평균(13.1명)에 미치지 못하고, 현재도 부족한 의사 수까지 고려한다면 앞으로 의사 부족 국가를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
 - 통계청의 2067년 인구 중위 추계인 3,920만을 상정하고, 현재 OECD 평균 수준의 의대 졸업생 배출을 목표로 할 경우, 지금보다 1,300명 이상 늘어난 연 5,100명 필요
 -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 천명 당 2명 이하의 의사가 분포된 지역은 11곳으로, 의사의 수도권 쏠림 심화로 지역 의사 부족 현상 심각
 - 2018년 기준 전체 의사의 54%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도내 의사 수는 인구 천명 당 1.7명으로, OECD 평균 대비 약 3,200명 부족한 상황
 - 지역의 경제적, 인구구조적, 지리적 특성 등이 의료접근의 용이성과 무관하지 않은 도민의 건강 지표 개선을 위해 부족한 의료 인프라와 의사 인력 확충이 시급
- 양질의 의학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규모의 정원 확보
 - 기초의학, 25개 전문과목, 세부분야 교육 등을 위해 우수한 교수진 확보 및 적정 규모의 의대 정원 확보
- 전라남도의 바이오·헬스 산업을 주도하는 의사과학자 육성

15) 2006년 이후 동결된 40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의 총 정원 3,058명을 3,458명으로 확대. 증원 목적은 의료 취약지역과 특수전문 분야에서 종사할 의사 및 의과학자 양성심뇌 질환, 응급 등 지역의 취약한 중증·필수 의료 담당할 지역 의사제를 통해 선발된 의대생은 전공 분야를 필수 전문과목으로 한정하고, 면허 취득후 인턴, 레지던트 수련기간 4~5년을 포함 10년 동안 지역 내 복무 의무화, 중증외상, 소아외과, 감염 및 역학조사 등 비인기 전문과목 의사 500명, 의과학자 500명 등)(2020.7.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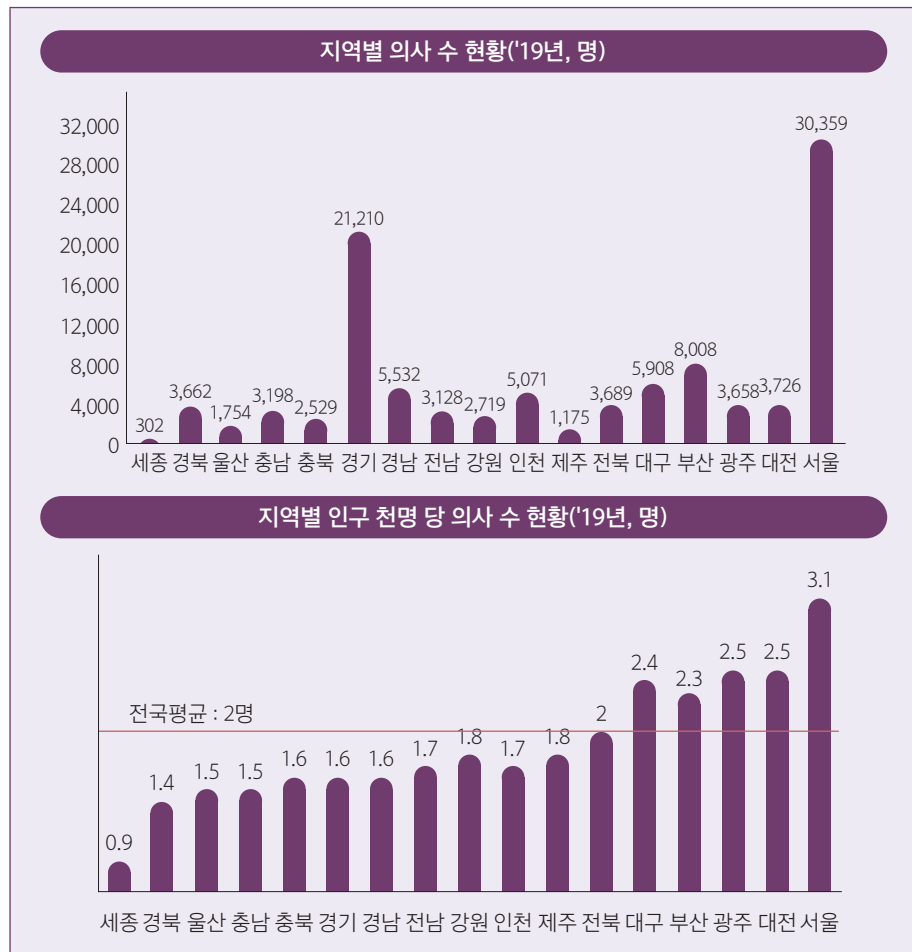
- 전라남도 경제의 발전 동력으로서 첨단의료에 대한 과학기술적 역량 확보를 위한 의사과학자 육성
- 광주과기원, 목포해양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등 지역 특화 대학들과 연계, 융복합 의료기술 개발과 사업화의 임상적 근거지로 육성

그림 III-4-16
2067년 인구 10만명당
의대졸업생 수 추정



자료 : 황성웅(2020), '공공의료자원 확충과 전남의 의대 육성 방향', 「광주전남 정책 Brief」, p.4.

그림 III-4-17
지역별 의사수 현황



자료 : 보건복지부 배포자료(2020.7.23.),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 디지털헬스케어 실현

- ICT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인프라 구축 및 선제적 주민건강관리 모델 수립
 - 지역사회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 민·관 협력 모델의 개발·적용으로 근거 중심의 건강증진 정책, 사업 추진으로 도민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형평성 제고
 - 서비스 모델 적용을 위한 보건소, 1,2차 민간 의료기관, 요양기관 등 시군 보건 의료기관 간 산학연병 협의체 구축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적용 및 지역 내 인프라 연계·활용으로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강화 기반 조성
 - 개인 맞춤형 건강데이터 정보의 연계와 데이터 기반의 개인건강관리시스템 구축
 - 기 개발된 스마트 기술 활용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건강정보 수집 및 저장, 전달 시스템 구축
- 전남형 디지털 보건소 운영 및 인력양성
 -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디지털 헬스 건강 관리 요구도 기반의 소생활권 스마트 건강관리서비스 모델 개발
 -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의료취약지 시범사업 등의 적극 추진을 위한 인력 양성
 -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내 디지털 헬스 건강관리 전문 인력 배치
 -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개발
 - 제공자가 건강상태, 개인특성(행동패턴, 요구도 등)에 따라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및 관리 메시지 전달 등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모델 구축

도민의 존엄을 보장하는 촉촉한 복지 안전망 구축

1. 현황과 문제점

인구감소와 구조변화에 따른 초고령화와 복지대상 증가

- 전라남도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전라남도 전체 인구의 23.7%(2020년 기준)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함. 독거노인 가구 비율도 점차 증가해 2021년 기준 25.6%로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내 지역사회 내 돌봄 체계 마련이 시급

그림 III-4-18
전라남도 인구추이 및 연령별 인구현황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2021년 5월 기준, 전라남도의 연령별 인구는 50세-59세가 17.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40세-49세 13.9%, 60세-69세 15.1%로 중장년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고령인구 비율은 시군별로는 고흥군이 41.7%로 가장 높고, 광양시가 13.6%로 가장 낮음
- 순천시·광양시를 제외한 전 시군이 전국 평균 16.7%를 상회하며, 목포시·여수시·순천시·광양시를 제외한 18개 시군이 초고령사회에 진입

계층별 복지시설 부족과 시설 비중 및 지역 간 공급 격차가 큼

- 전라남도 복지시설은 총 11,705개로, 노인과 아동 관련 복지시설의 비중이 전체의 96.7%를 차지하고 있음
 -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노인(82.3%)과 아동(14.4%), 장애인(1.6%)으로 경상남도, 전라북도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노인, 아동 시설기관이 많고, 장애인 시설 비중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노인 시설 비율은 42.6%, 아동은 31.3%, 장애인은 13.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시군별로는 목포시가 178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여수시(152개), 순천시(137개), 나주시(94개) 순으로 나타나, 주요 도시지역과 다른 시군 지역의 공급 격차가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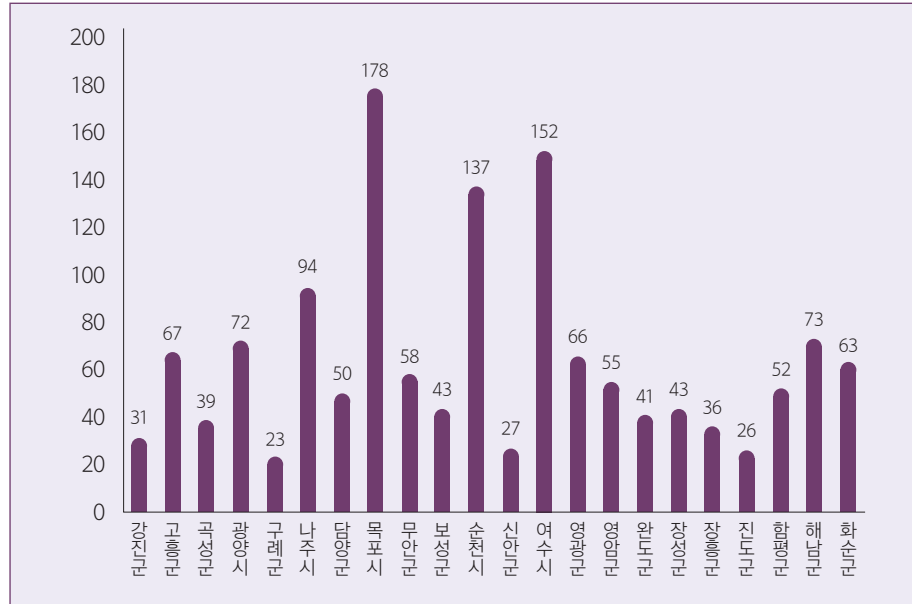
표 III-4-17
전라남도 사회복지 시설
현황
(단위: 개, %)

시설유형별 기관수		전라남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시설 유형 별 기관 수	합계	11,705	100.0	11,757	100.0	9,345	100.0
	노인(경로당 포함)	9,630	82.3	7,865	66.9	7,182	76.9
	장애인	192	1.6	286	2.4	186	2.0
	아동(어린이집 포함)	1,691	14.4	3,313	28.2	1,762	18.9
	청소년	61	0.5	86	0.7	58	0.6
	저소득	24	0.2	23	0.2	23	0.2
	가족(다문화·한부모)	30	0.3	27	0.2	24	0.3
	기타	61	0.5	125	1.1	93	1.0
	일반	16	0.1	32	0.3	17	0.2

자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2020. 2. 18. 검색.

자료: 어린이집-e나라지표 보육통계, 청소년 수련시설-여성가족부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현황, 경로당-보건복지부 노인 복지시설 현황 참고.

그림 III-4-19
시군별 사회복지시설 현황



주: 어린이집 및 경로당 제외.
 자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2020. 2. 18. 검색.
 자료: 청소년 수련시설-여성가족부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현황(2018년도 기준) 참고.

-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생활시설(주거복지시설+의료복지시설)이 340개, 재가노인 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이 844개로 파악됨
 - 노인생활시설에는 현재 총 8,647명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음. 생활시설 형태는 주거복지시설보다는 의료복지시설 형태가 대다수임(91.7%)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노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 시설은 844개로 이용자 수는 26,318명으로 파악됨. 또한, 여수시(108개), 목포시 (101개), 순천시(99개)가 다른 시군에 비해 비교적 많은 시설이 분포하고 있음
- 노인복지관은 총 30개, 경로당은 총 9,047개로 파악됨(전라남도 내부자료, 2019)
 - 노인 천명당 여가복지시설 수는 '16년 17.26개→'17년 16.83개→'18년 16.50개로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임. '18년 기준 전국 평균은 6.08개로, 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는 전라남도가 가장 많은 상황임
-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어린이집 제외), 공동생활 그룹 홈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32개로 가장 많고, 이어 아동 양육시설이 21개, 학대 피해아동 쉼터는 8개 등 총 63개소가 운영 중임. 시설 정원은 1,906명이며, 현원 1,205명임(2019 기준)
 -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는 '16년 13.6개→'18년 15.0개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전라남도는 '16년~'18년 기간 동안 유아 보육시설 수가 전국에서 가장 크게 증가 하였으나,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는 여전히 전국 평균 16.2개에는 미치지 못함

표 III-4-18
전라남도 아동복지시설
현황

시설명	개소	시설 거주자		종사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합계	63	1,906	1,205	714	630

시설명	개소	시설 거주자		종사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아동 양육시설	21	1,560	979	561	489
아동 보호치료시설	1	40	16	14	11
자립지원시설	1	30	11	3	2
공동생활 그룹홈	32	224	173	96	92
학대 피해아동 쉼터	8	52	26	40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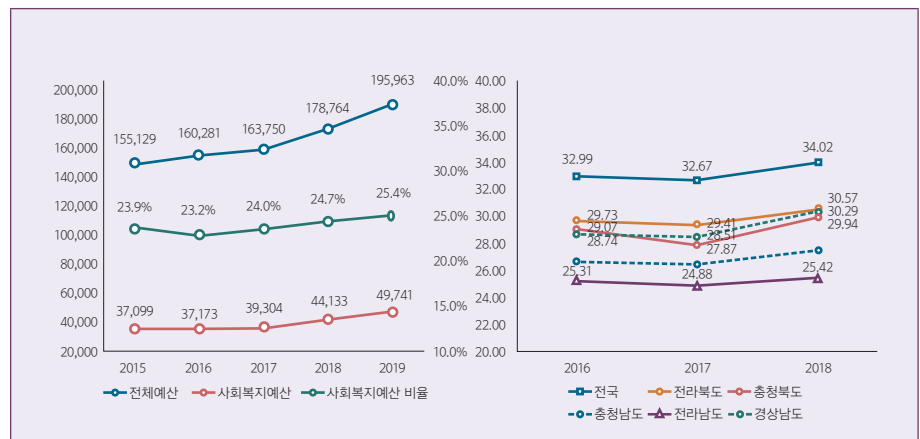
자료: 전라남도 내부자료(2019)

- 장애인복지시설은 2018년 총 58개로, '17년과 비교해 증가하지 않았음. 등록장애인수는 전국에서 6번째로 많지만, 시설 수는 광역지자체 중 18번째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낮은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증가

- 전라남도 전체 예산은 '19년 19조 5,963억 원임(일반 17조 4,257억 원, 특별 2조 1,706억 원). 이 중 도 예산은 7조 3,691억 원(37.6%)이며, 시군 예산은 12조 2,271억 원(62.4%)이고, 이에 따른 재정자립도는 19.1%임. 재정자립도는 '18년 19.8%에서 0.7%하락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국에서 가장 낮음(통계청, 2019)
 -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15년 23.9%(37,099백만 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19년에는 25.4%(49,741백만 원) 수준으로 증가함. 기초생활보장, 노인, 보육 등 복지 분야 수요 증가로,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지난 3년간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 수준은 높지 않음

그림 III-4-20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
비율 / 복지예산 증가수준
타 지역과 비교 그래프



자료: 전라남도 홈페이지(2019), 통계청(2019)

- 지원 대상자별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살펴보면, 노인·청소년 분야 예산 수준이 40.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초생활보장(28.1%), 보육·가족 및 여성(20.8%) 순으로 나타남

◆ 늘어나는 사회복지수요에 대응한 사회복지 인력 증원

- 사회복지직공무원은 현재 총 1,659명이 배치되어 있음('19년 6월 말 기준). '17년 93명→'18년 184명→'19년 173명으로 인력을 증원해 왔음
 - 전라남도는 서울, 경기도, 경북, 부산에 이어 다섯 번째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2020).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16년 1,423.0명→'18년 1,161.6명으로 낮아졌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는 '18년 기준 총 24,463명으로 파악됨. 인구 1명당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는 0.0130명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인구 대비 많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를 나타내고 있음
 - 대상자별로는, 어린이집 종사자 수가 11,447명(46.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노인 관련 시설(경로당 제외) 종사자 수가 9,466명(38.7%)로 나타나, 전라남도 사회복지시설 인력은 85.5%가 노인·아동 관련 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전국 타 지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임

2. 여건 변화 및 전망

◆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과소지역 증가

- 전라남도 인구는 2020년 12월 기준 총 1,851,549명으로 전년 대비 17,196명 감소하였으며, 2010년 대비 연 평균 0.03% 감소율을 나타냄. 합계출산율은 2020년 기준 1.15명으로 전국 평균 0.84보다 높고, 타 시도에 비해 상위를 차지하나 인구대체 수준인 2.1명과 OECD 평균인 1.68명 보다는 낮음
 - 출산율 저하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향후 10년 이내 총인구 및 생산 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임

◆ 초고령화, 1인 가구,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복지대상 지속적 증가

- 전라남도 2019년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가구는 64,855가구, 87,003명으로 전라남도 인구 대비 4.7%로 2017년 이후 증가세를 보임. 반면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타 광역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이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 부족이 우려됨
- 저출산 및 고령화의 영향으로 아동 인구 비율은 2015년 이후 꾸준히 줄고 있음. 넓은 면적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밀도를 보이는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아동이 있는 가구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의 확충이 필요함. 특히, 아동복지관이 설치된 시군이 전무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여가·문화시설 확충이 요구됨

📍 변화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인프라와 인력 확충 필요

- 전라남도의 등록장애인 비율은 전국 최고(7.6%, 2018년 기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백 명당 장애인복지시설 수는 0.10개로 전국 최하위 수준임. 특히, 자원 편중현상으로 일부 시 지역에서만 밀집도가 높고 대부분 군지역은 접근성이 매우 낮아 해소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정신장애인 비율도 2018년 기준 0.3%로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내지만, 1~2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정신재활시설 등 정신건강증진기관이 전무한 지역이 대다수로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할 통합 돌봄 체계 구축 필요
- 노인 천 명당 여가복지시설 수는 2018년 기준 16.5개소로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내지만 돌봄, 의료, 소득 등 다방면의 사회보장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다양성, 충분성, 접근성 측면에서 부족한 상황
 -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노인 인구 비율 상위권인 고흥군, 보성군, 함평군, 신안군, 곡성군에는 방문간호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등 재가복지시설이 전무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 시니어클럽 운영도 이뤄지지 않는 곳이 대부분임. 양로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생활 시설 확충 필요

📍 지역간 복지격차 확대 및 사각지대 발생

- 전라남도는 전국 486개 유인도서 중 277개(약 57%)가 밀집한 대표적 도서지역으로 전라남도 인구 대비 약 9.6%가 섬에 거주하나 육지 및 도시 중심으로 설계된 복지 전달체계로 인해 각종 복지시설 및 서비스 부재 등 복지 기본권에서 소외되고 있음
 - 섬 주민 대상 복지욕구 조사 결과에서도 보건의료, 교육, 문화·체육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게 나타나 섬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절실

3. 주요 정책과제

1) 기본목표

📍 도민의 존엄을 보장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존엄한 삶이 가능하도록 촘촘하고 안정적인 건강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2) 추진전략

📍 미래사회 대응 지역복지정책 전환체계 구축과 운용

- 초고령사회 진입, 저출산 등으로 향후 10년 이내 총인구 및 생산 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지방소멸 위험 가시화

- 미래 성장동력 위협요소인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필요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 조성으로 미래세대가 자라나는 지역사회 환경 구축

❖ 계층과 지역에 따른 복지격차 해소와 보편적 복지 강화

- 노인과 아동 중심의 복지시설과 서비스 제공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인프라 및 인력, 서비스 제공
- 전국 유인도서 중 60% 가량이 전라남도에 밀집해 도서 및 산간 등 지리적 복지 사각지대 비중이 높은 편으로 병원선 운영, 섬주민 생활불편 해소 사업 등 도서 및 산간지역 복지 서비스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모색 필요
- 섬주민 복지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문화 및 교육여건 불만족이 높고, 문화·체육 관련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등을 통해 문화·여가 인프라가 절대 부족한 도서 및 산간 지역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

❖ 생활안전망과 공동체 기반의 계속 거주 지원

- 전라남도의 노인인구, 등록장애인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노인·장애인의 돌봄 수요가 높음
- 초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및 장애인 등에게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제공이 요구됨
- 지역내 돌봄 수요자들이 자립 혹은 돌봄 생활이 가능하도록 포괄적, 연속적 서비스를 제공 가능한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 필요
- 돌봄의 생활안전망 구축으로 안전하고 존엄한 노후가 가능한 환경 조성

❖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사회복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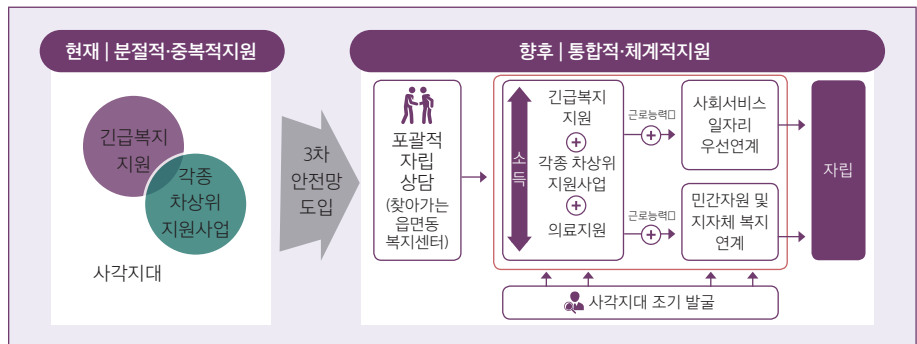
- 고령화, 장애, 빈곤 등 취약한 지역사회 경제 여건으로 인해 공공부조만으로 기초 생활 보장이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 발생의 우려가 높음
- 도내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작지만 강한 복지 지원 시책 확대 필요
- 지역 내 노인 및 장애인 고용 확대, 취약계층 주거 지원, 전라남도 농어촌 특화형 자활사업 등 자립 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취약계층 기초생활 보장 강화
- 중증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노인학대 전수조사 등 장애인, 빈곤층 지원 등 촘촘하고 체감적 지원 확대

3) 핵심 프로젝트

◈ 전라남도 농산어촌의 격차 없는 복지기반 구축 및 운영

- 도서 및 산간지역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의 복지인프라와 복지서비스에 결핍이 없도록 전라남도 어디서든 일정 수준의 복지를 향유하는 기반과 체계 마련
- 전라남도는 도서 및 산간지역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균형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 국 3,000여개 섬 중 2,165개가 전라남도에 위치하며, 전국 486개 유인도서 중 277개(약 57%)가 밀집
 - 도서지역 특성상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고,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급격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농산어촌, 과소화마을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정적인 복지인프라 구축과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함
 -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나 경로당 위주로 시설 구성이 다양하지 않으며, 노인일자리 기관의 경우 미설치 지역도 있어 지속적인 공급 필요
 - 부모들은 국·공립시설을 선호하나 어린이집의 14%(이용률 17%)에 불과하여 수요에 부합하는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가 부족
 - 장애인복지시설 중 보호작업장이 발달하였으나 도내 미설치된 지역이 있으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센터 등이 설치되었으나 평생교육시설은 매우 부족함
- 지역 복지수요계층의 욕구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행정지원 체계를 인구구조변화에 맞춰 설계하고 운영
 - 도민의 복지 필요와 욕구에 따라 지원사업을 체계화하고, 통합지원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해 가야 함

그림 III-4-21
지역복지 지원체계



◈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고도화

- 도민이면 누구나 살고 싶은 곳에서 돌봄과 복지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생활단위 재가복지와 돌봄 시스템을 정착
 - 정부는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반 구축을 목표로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연계를 4대 핵심중점과제로 제시
 -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보편적 돌봄이 가능하도록 전남형 커뮤니티 케어 환경과 정책을 고도화

- 돌봄과 일자리, 지역자원이 선순환하는 구조의 지속적인 모델발굴을 통해 다양한 지역환경에서도 커뮤니티 케어가 가능하도록 복지서비스 고도화를 지향
 - 케어안심주택을 포함한 주거, 방문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관리 등 보건의료, 재가 장기요양과 돌봄서비스, 스마트 홈 등 복지·돌봄 등 주요 서비스 고도화
- 고령인구 증가와 더불어, 장애인, 정신장애인, 노숙인 등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수요자들을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자립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포괄적, 연속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 시책 마련이 중·장기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함
- 전라남도의 노인 인구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고, 가장 빨리 초고령사회에 진입함. 장래 고령인구 추계를 살펴보면 2020년 22.9%, 2025년 27.2%, 2030년 32%로 점차 증가 추세를 나타내며, 2045년에는 45.1% 이상이 될 것으로 추계됨에 따라 지역 소멸 위기감마저 고조됨
 - 노인·장애인·노숙인 등 돌봄 수요가 매우 높아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및 장애인 등에게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제공이 요구됨
 - 지역사회에 거주 가능한 돌봄 수요자들이 자립 혹은 돌봄 생활이 가능하도록 포괄적, 연속적 서비스 제공 가능한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 필요
 -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설치, 치매노인 재가방문돌봄 제공, 치매 안심마을 추진과 함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을 중점추진사업으로 선정

📍 지속가능한 복지와 다양성에 기반한 사회보장 기반 마련

- 인구과소지역과 초고령사회에 어울리는 사회복지 전환 사업
 - 향후 10년 이내 총인구 및 생산 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지방소멸이라는 지속가능성 위기 가시화
 - 미래 성장동력 위협요소인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 조성으로 미래세대가 자라나는 지역사회 환경 구축
 - 분만취약지 도서 및 산간지역 대상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및 운영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
- 다양한 가정 지원 및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복지 정책 실현
 - 한부모·미혼부모·조손·입양·다자녀·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정 형태가 증가 추세,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지역사회 내에서 차별 없이 건강한 가족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가족 안정성 강화를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

- 결혼이민자 모국어 상담원 채용 지원,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모자가족 복지시설퇴소자 자립정착지원금 지원 등 취약·위기가정 경제적·정서적 자립역량 강화를 시작으로 수요와 필요에 따른 지원 확대

📍 선순환형 전라남도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 도시·도농복합·농산어촌 공존형 전라남도 복지전달체계 구상
 - 도시·도농복합·농산어촌이 공존하는 전라남도의 사회보장체계 확립을 위해 다양한 주민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전남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속 확충으로 주민 개인별 욕구에 맞춘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 강화를 지향하며,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현
 - 지역사회 민·관협력 복지 거버넌스 구축,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 등 전남형 복지 브랜드 개발 및 전달체계 구축 중점 추진으로 지역의 복지 능력 강화
- 민관협력 복지거버넌스를 통한 복지전달체계 향상성 확보
 -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 강화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역량강화 필요.
 - 사회서비스기반, 노인 일자리 등의 적극적인 발굴과 자원 매칭을 통해 안정적인 협력형 복지전달체계 기반 마련
 - 지역복지수요 대응을 위한 복지거버넌스 주체를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복지 거버넌스 아젠다 등이 발굴, 실천되도록 구상

도민 안전을 책임지는 스마트 재난대응체계 구축

1. 현황과 문제점

☞ 자연재난피해 현황

- 최근 5년간 전라남도에서 발생한 자연재난 피해액은 총 2,691억여원으로 호우 피해가 2,163억여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80.4%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태풍피해가 435억여원으로 16.2%를 차지
 -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고, 호우피해는 2020년 여름철 집중 호우 등으로 구례 등 동부권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
 - 대설, 지진, 풍랑 등으로 인한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향후 대형 재난피해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사전 대비책이 필요

표 III-4-19
전라남도 자연재난발생
원인별 피해 현황
(2016~2020)
(단위: 천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합계	11,958,267	148,416	20,205,812	19,519,371	217,253,511	269,085,377
태풍	6,747,595	-	15,027,708	19,497,171	2,241,376	43,513,850
호우	-	148,416	1,222,560	21,300	214,867,226	216,259,502
대설	4,991,426	-	-	-	144,909	5,136,335
강풍	-	-	-	-	-	0
지진	1,200				-	1,200
풍랑	218,049			900	-	218,949

자료: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 사회재난피해 현황

- 최근 5년간 전라남도에서 발생한 사회재난 피해 건수를 보면, 교통사고가 49,997건으로 전체 피해 건수의 68.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화재건수가 13,169건으로 18.0%를 차지
 - 해양사고는 전체 사고 건수의 4.0%에 불과하지만 바다가 넓고 섬이 많은 지역 특성상 타지역에 비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전라남도 해양사고 건수는 5년간 총 3,446건으로 전국 17,001건의 20.3%를 차지. 이는 그다음인 경남의 2,335건보다 1,111건이 많고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6%p 높음

표 III-4-20
전라남도 사회재난발생
원인별 발생 현황
(2016~2020)
(단위: 건)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합계	13,744	14,694	14,471	15,602	14,737	73,248
화재	2,454	2,963	2,635	2,645	2,472	13,169
산불	23	33	39	37	36	168
붕괴	3	1	19	19	154	196
도로교통사고	9,558	9,833	9,840	10,950	9,816	49,997
환경오염	5	10	10	6	18	49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유·도선	5	3	4	1	2	15
수난	57	140	203	200	676	1,276
해양	507	635	698	920	686	3,446
기타사고	1,132	1,076	1,023	824	877	4,932

자료 :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전국 도 단위 지역안전지수 현황 비교

- 전라남도의 지역안전지수 등급은 타 도단위 지역과 비교하여 대체로 취약한 수준임
 - 교통 분야는 3년 연속 5등급, 화재와 감염병은 5등급, 생활안전 3등급으로 취약
 - 범죄, 자살 분야는 2020년 2등급으로 양호한 편임

표 III-4-21
전국 도 단위 지역안전지수
현황

구분	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경기	1	1	1	1	1	1	4	4	3	1	1	1	1	1	1	1	1	1
강원	3	3	3	4	3	4	4	3	4	3	4	4	4	4	5	4	5	4
충북	2	2	3	5	3	3	3	4	4	3	3	3	3	3	3	3	3	2
충남	3	4	4	3	3	4	3	3	3	4	4	4	5	5	4	3	3	3
전북	4	3	3	3	4	3	2	2	1	2	2	2	4	3	4	3	3	3
전남	5	5	5	4	4	5	1	2	2	4	3	3	3	2	2	4	4	5
경북	4	4	4	3	2	2	2	1	2	3	3	3	3	3	3	5	4	4
경남	2	2	2	2	5	3	3	3	3	2	2	2	2	2	2	2	2	3
제주	3	3	2	2	2	2	5	5	5	5	5	5	2	4	3	2	2	2

자료 :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전라남도 시군 지역안전지수 현황

- 교통사고 : (1등급, 우수) 완도, (2등급, 양호) 신안
- 화재 : (2등급, 양호) 구례, 영광
- 범죄 : (1등급, 우수) 신안, (2등급, 양호) 나주, 곡성, 함평, 영광, 장성
- 생활안전 : (1등급, 우수) 무안, (2등급, 양호) 광양, 구례, 화순, 해남, 영암, 영광, 장성, 완도, 신안
- 자살 : (1등급, 우수) 담양, 완도, 신안, (2등급, 양호) 여수, 순천, 광양, 곡성, 고흥, 화순, 강진, 함평, 장성
- 감염병 : (1등급, 우수) 영암, (2등급, 양호) 광양, 구례, 화순

표 III-4-12
전라남도 시군별 지역안전
지수 현황(2020)

(단위: 등급)

구분	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목포시	3	3	5	3	3	4
여수시	4	4	4	3	2	3
순천시	4	4	4	3	2	3
나주시	5	4	2	4	3	5
광양시	4	4	3	2	2	2
담양군	3	3	3	3	1	4
곡성군	4	3	2	4	2	5
구례군	4	2	4	2	4	2
고흥군	4	4	3	3	2	5
보성군	5	5	3	3	3	4
화순군	3	3	3	2	2	2
장흥군	4	4	5	3	5	4
강진군	3	4	4	3	2	5
해남군	4	3	4	2	3	5
영암군	3	3	4	2	3	1
무안군	3	4	3	1	3	3
함평군	4	3	2	3	2	4
영광군	3	2	2	2	3	4
장성군	3	3	2	2	2	4
완도군	1	5	4	2	1	3
진도군	5	4	4	3	5	5
신안군	2	4	1	2	1	4

자료: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주요 재난 발생 현황

-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20년 기준 인구 만명 당 53.02건으로 2019년 58.20건보다 감소하였지만 매년 증가하는 추세
- 화재 발생건수는 2020년 기준 인구 만명당 13.35건으로 2016년 12.89건보다 증가하였지만 다소 감소하는 추세
- 5대 범죄 발생건수는 2020년 기준 인구 만명당 84.87건으로 2016년 92.82건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추세
- 구급 발생건수는 2020년 기준 인구 만명당 731.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감염병 발생 건수는 25.01건으로 감소 추세
 - COVID-19로 인해 2020년 이후 감염병 발생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자연재해 피해액은 2020년 호우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

표 III-4-23
**전라남도 주요 재난 발생
 변화(2016~2020)**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교통사고 발생건수(건/만명)	49.92	51.52	51.98	58.20	53.02
화재 발생건수(건/만 명)	12.89	15.62	13.99	14.15	13.35
산불발생건수(건/10,000km ²)	18.67	26.75	31.60	29.97	29.15
5대 범죄 발생건수(건/만 명)	92.82	83.67	84.13	89.07	84.87
구급 발생건수(건/만 명)	582.40	632.41	697.22	739.80	731.60
자살 사망자수(명/만 명)	2.95	2.50	2.79	2.53	2.84
감염병 발생건수(건/만 명)	39.77	48.34	48.64	39.95	25.01
자연재해 피해액(천 원/1km ²)	970.73	12.03	1636.95	1581.13	17594.08
화학사고(건)	5.00	10.00	6.00	2.00	6.00
질병 및 사망외인 사망자수(명/만 명)	8.55	8.01	7.88	7.27	8.10

자료 : 통계청, 경찰범죄통계, 소방통계연보 재구성

📌 재난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확대

- 기후변화로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난과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생활안전 등 사회재난위험에 지속 노출
 - 전라남도는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안전 취약지역(지역안전지수), 여름철 집중 호우, 태풍 노출 지역
 - 지역 특성상 재난 약자,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많은 재난안전 취약계층 분포
- 재난환경의 불확실성, 대형·복합·신종재난 대응, 안전문화·교육·홍보, 일상적 안전 위험요인에 대비한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요구 확대
 - 특히 전라남도의 지형, 기후, 대응역량을 고려한 재난이슈 대응 체계 구축 필요
 - 지역사회 스스로가 지역의 재난안전 문제 및 이슈 분석과 스마트 기술 활용을 통한 신속한 광역방재시스템 구축으로 문제 해결 능력 확대

2. 여건 변화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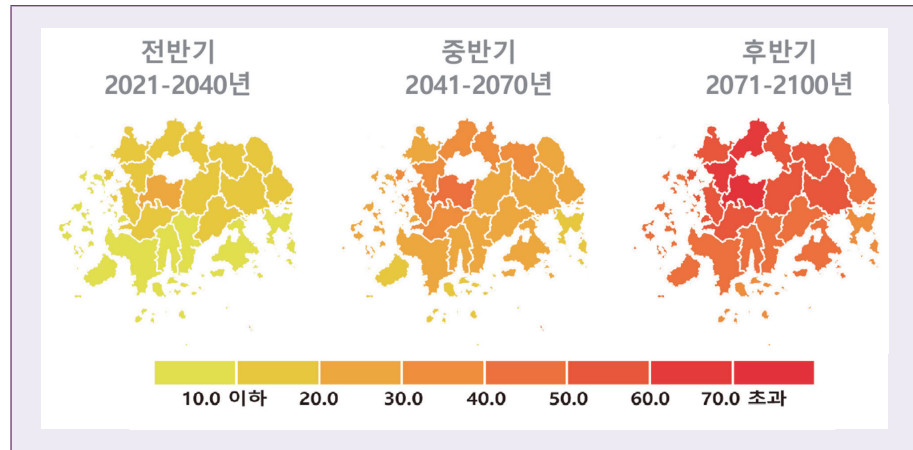
📌 자연 및 사회재난, 안전관리와 관련한 주요 여건변화 및 전망

-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의 대형화, 새로운 유형의 재난 발생 가능성 증가
- 방사능, 미세먼지, 홍수, 지진, 화산 등 복합재해발생 및 월경성 물질 확대 우려
- 노인, 장애인, 비정규직, 외국인 등 다양한 안전취약계층 증가
- 안전, 행복 등 도민의 질 높은 환경과 안전권리 요구 확대
-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 4차산업혁명 기반 재난안전기술 발달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한파일수 변화

-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인 RCP8.5 시나리오에서 전라남도의 폭염 일수는 2001~2010년 기준 8.5일 대비 21세기 중반기(2041~2070년) 19.1일 증가한 27.6일, 후반기(2071~2100년)는 42.9일 증가한 51.4일이 될 것으로 전망
 - 전라남도는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폭염일수가 1.7일 더 적은 상황이지만 RCP8.5의 경우 21세기 후반기(2071-2100년)에는 전국 평균 대비 폭염일수가 15.9일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
 - * 전국 평균 폭염일수 변화 : (2001-2010년) 10.2일 → (2071-2100년) 35.5일(25.3일) 증가
- RCP 8.5시나리오상 21세기 후반기 전라남도 내 폭염일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나주시 (70.1일)로 나타남. 전라남도 내 각 시군의 기온 상승폭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현재 발생일수가 많은 지역에서 21세기 후반기에도 많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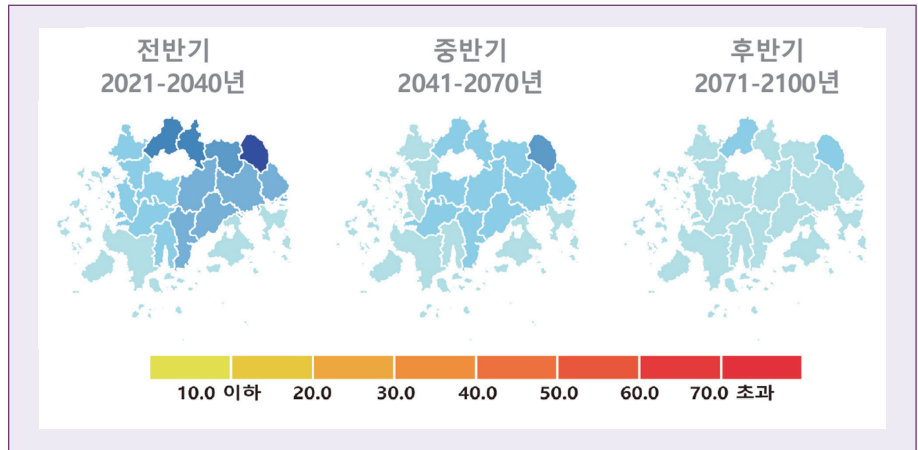
그림 III-4-22
전라남도의 폭염일수 전망
(RCP 8.5 시나리오)



자료 : 2018 전라남도 기후변화 전망분석서

-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인 RCP8.5 시나리오에서 전라남도의 한파일수는 2001~2010년 기준 0.8일 대비 21세기 중반기에 0.6일 감소하여 0.2일, 21세기 후반기에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전라남도는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한파일수는 4.2일 더 적음. RCP8.5의 경우 21세기 후반기(2071-2100년)는 한파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 우리나라 평균 한파일수 변화 : (2001-2010년) 5.0일 → (2071-2100년) 0.0일(5.0일 감소)
- RCP8.5시나리오상 21세기 후반기 전라남도 내 한파일수가 많은 지역은 구례군 (0.2일)으로 나타남. 구례군과 장성군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한파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전라남도 내 각 시군의 기온 상승폭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현재 지수가 높은 지역에서 21세기 후반기에도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

그림 III-4-23
 전라남도의 한파일수 전망
 (RCP 8.5 시나리오)



자료 : 2018 전라남도 기후변화 전망분석서

❖ 방사능, 미세먼지, 홍수, 지진, 화산 등 복합재해발생 및 월경성 물질 확대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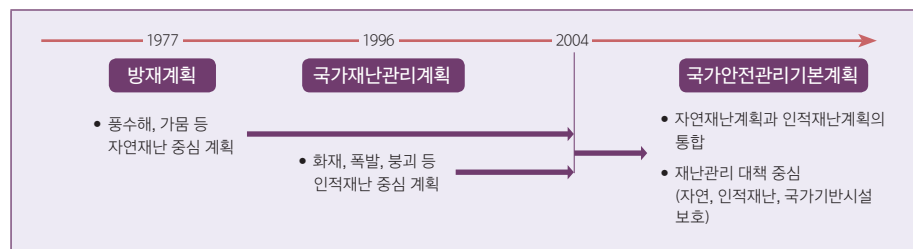
- 기후변화로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와 기술의 고도화, 도시환경의 복잡화로 자연재해의 영향이 사회적 재난을 유발하는 대형복합재난의 문제 발생
 - 자연-인간, 사회-인간 등 재난발생 구조에서 재난이 대형화, 복잡화됨에 따라 재난유형간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 2차원적인 복합재난 형태로 변화
 - 대형복합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예측 가능한 범위 밖의 거대한 규모로 전개되는 재난
 - 대형복합재난은 위험의 내외부적 경계를 초월하고 경험하지 못한 재난으로 기존의 재난관리방식과 다른 새로운 재난관리방식 필요
 - 지진, 해일, 태풍 등의 자연재난, 교통사고, 화재 등의 사회재난과 달리 대형복합재난은 피해규모가 대형화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 복구 및 갈등관리과정 요구
- 한 국가의 환경오염이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월경성 환경오염 사례는 점점 증가
 -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비롯해 기후변화 문제 등이 월경성 환경 문제이자 그 피해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보다는 기후변화 대응이 취약한 저개발 국가에 영향을 더 많이 주는 사례
 -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 온실가스에 대한 마땅한 국제적 대책 전략을 세우지 못한 채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인 문제가 결부되면서 더욱 복잡한 관계 형성

❖ 노인, 장애인, 비정규직, 외국인 등 다양한 안전취약계층 증가

- 안전취약계층은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위험인자를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입기 쉽거나 받은 피해로부터 복구행위가 어려운 사람 또는 계층을 말함
 - 재난약자들은 신체적·정신적·물질적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어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그 타격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물질적 피해가 다른 일반인에 비해 더 클 수밖에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피해 저감 노력 경주
 - 우리나라는 1977년부터 1995년까지 주로 풍수해, 가뭄 등의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방재계획을 수립·시행했으나 1990년대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등 인적재난이 빈번해짐에 따라 1996년부터 2004년 재난관리법에 따라 국가재난관리계획을 수립·시행
 -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대구지하철 사고 등 초대형 재난이 발생하자 2004년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 재난관리전담 중앙행정기관인 소방방재청 신설
 - 정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포괄하는 통합적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하고, 2005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그림 III-4-24
2004년 전후
재난관리계획체계



자료 :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안전, 행복, 삶 등 국민의 질 높은 환경과 안전권리 요구 확대

- 안전권은 국민의 생명·신체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영위할 중요한 기본권
 - 안전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전제적 기본권이며, 다른 기본권보다 우선함
 - 우리나라 헌법에는 안전권이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안전권은 우리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37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
-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갖춘 환경을 가질 권리(환경권) 실현에 대한 요구 증가
 - 환경권은 지난 1980년 제8차 개헌으로 헌법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환경법은 1963년 공해방지법 제정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사회발전에 따라 발생한 각종 환경문제 대응을 위해 양적·질적으로 확대

○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 4차산업혁명 기반 재난안전기술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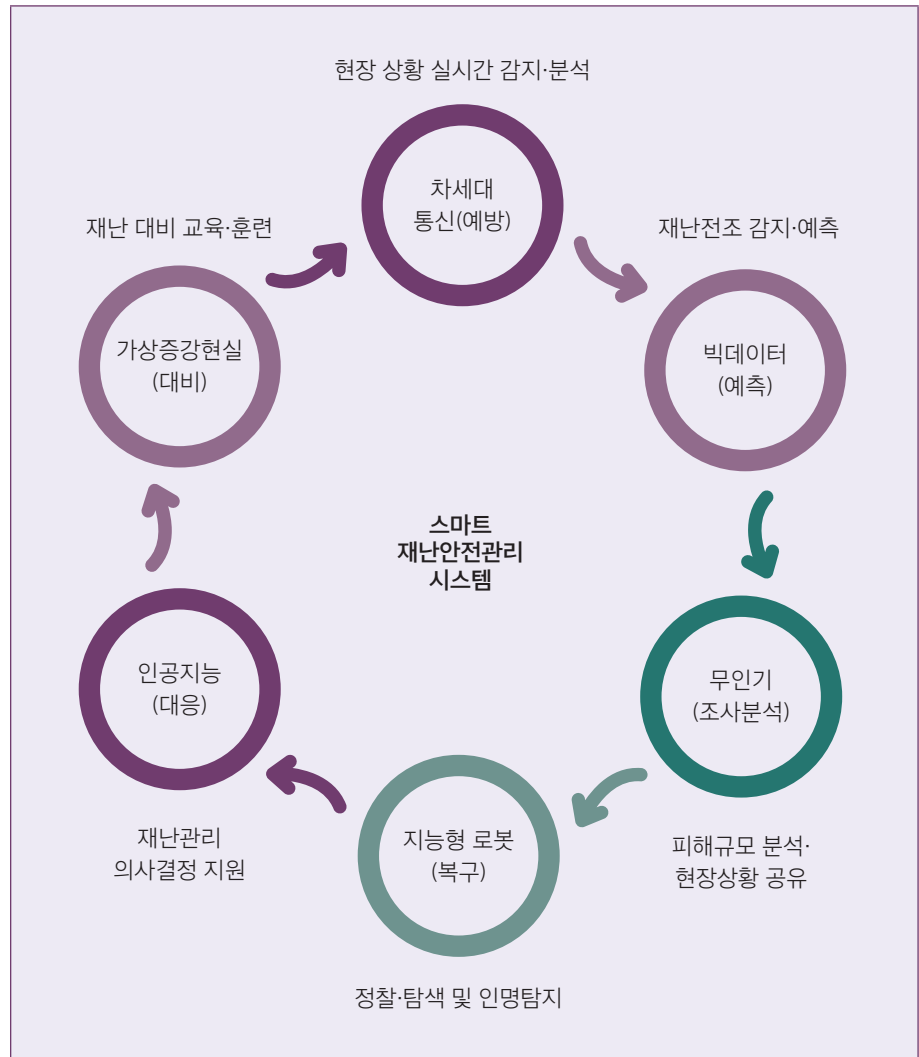
- 정부는 혁신성장동력 기술들을 활용해 재난관리 단계별로 스마트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점과제를 추진
 - 빅데이터 기반 재난전조 감지 및 예측, 사물인터넷(IoT) 등 차세대 통신 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 실시간 감시, 가상·증강현실 기반의 재난대비 실증형 교육·훈련, 인공지능 기반의 실질적인 재난현장 의사결정 지원, 지능형 로봇 등을 활용한

인명 탐지, 정보 탐색 등 복구지원, 무인기·위성을 활용한 현장대응 지원 및 사고조사 등 상황공유 분석 등

- 앞으로 혁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한 전주기 스마트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강화 가속화
- 4차산업혁명기술 기반 재난안전의 획기적 도약 전망

*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무인기,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 로봇, 지능형 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등

그림 III-4-25
스마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행정안전부)



3. 주요 정책과제

1) 기본목표

📍 탄력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지대 구현

- 재난에 대응한 선제적 예방기반 구축

-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 강화
- 지역특성을 고려한 재난유형별 맞춤형 대응시스템 구축

2) 추진전략

◈ 단계별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핵심역량 강화

-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단계별로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 예방(홍보, 재난/안전관리 교육, 재난유형별 저감 활동, 시설물 안전성 확보), 대비(재난대비 협력체계 구축·운영, 재난대응 활동 문서관리, 재난대비 훈련, 재난자원 관리, 위기관리), 대응(재난정보관리, 재난상황관리, 비상대응기구 구축·운영, 주민보호, 위기관리 소통, 재난현장 대응관리, 재난현장 수습), 복구(재난복구관리, 지역사회 복원) 등
- 단계별 재난관리시스템 구동을 위한 재난관리 핵심역량 강화
 - 재난관리 기획, 재난관리 행·재정관리, 법·제도 기반체계 구축, 재난·안전관리 연구 및 산업 육성, 리더십 등 재난 관련 핵심역량 강화

◈ 재난에 대응한 선제적 예방기반 구축

- 재난 관련 빅데이터(B-data) 활용을 위한 재난징후 정보센터 운영·관리
 -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종 재난징후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기반정보를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피해를 사전에 최소화
 - 재해에 대한 취약(위험)시설, 지역, 계층 등에 대한 D/구축 및 재해위험지역정비, 소하천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재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재난 취약지역·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경보체계의 도입
 - 재난 취약지역·시설물 등에 모니터링·경보(CCTV)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 전라남도는 국립공원을 비롯하여 넓은 산림면적을 보유, 산불로 인한 피해가 전국대비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초기에 인지 및 대응, 그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모니터링 및 경보체계 도입

◈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 강화

- 재난·안전에 대한 긴밀한 협조시스템의 강화
 -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를 위해 재난상황관리에 대한 일원화
 - 모든 재난 발생에 대한 대응을 시스템적으로 총괄, 시군과 안전의식, 안전점검, 재난현장 지위 관련하여 긴밀한 협력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전문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현장전문 대응능력 향상

- 재난현장의 접근성 향상과 함께 재난현장에 대처할 전문 대응인력 확보
- 전남지역은 상대적으로 해상사고가 빈번하고, 향후에도 발생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며, 또한 원자력발전소와 석유·화학 등의 위험물 사고가 상존
- 위험물질 생산공장과 위험물 처리 및 운송차량 관리 강화 등 위험물 관리시스템 구축과 함께 노후 장비 교체·보강 등 특수 장비 확충 강화

📍 지역특성을 고려한 재난유형별 맞춤형 대응시스템 구축

- 위험물질에 대한 산업특화형 통합방재시스템 구축
 - 전남지역은 원자력발전소와 석유·화학산업단지 등의 각종 사고에 따른 위험물질에 대한 노출을 우려하고 있으며, 시설 노후화에 따른 불안감이 확대
 - 산업특화 재난관리체계 구축과 현장 중심 긴급 구난·구조체계 구축, 특히 기업들의 생산규모 및 설비특성을 감안한 특화된 상시 재난대응조직 운영 의무화 추진하고,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예방계획 수립 의무화, 주기적 정보제공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과의 상시적 소통체계 구축
- 원전·석유화학단지 등 위험물질에 대한 도민 대응능력 강화
 - 재난대응 기초역량 강화 및 상시훈련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유형별·시기별 맞춤형 상시 훈련으로 재난대응 역량을 유지·강화하고, 실천체험형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
 - 여수 석유화학산단 및 영광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은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과 대피요령, 노령화와 함께 농기계사고가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농기계의 운영·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교육 강화
- 농어업에 대한 재해보험 확대
 - 태풍 등 풍수해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농작물과 수산물에 대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피해가 심화·확대될 것으로 전망
 - 농어업재해보험 피해보상 품목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전 농어가의 보험가입 의무화를 위한 지원 필요
- 해난구조 등 재난유형별 맞춤형 특화교육기관의 설립·운영
 - 해상사고는 세월호 참사에서 보았듯이 종종 많은 인명피해와 함께 제2와 제3의 부가적 영향으로 사회경제적 피해 초래
 - 전남지역은 해상물동량과 교통량 증가 및 수산활동 및 해양레저 및 섬관광 수요 증가와 함께 각종 사고의 위험가능성이 상존
 - 재난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및 위기발생시 대처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난구조관련 특화기관을 설립
- 지역특화형 맞춤형 체험·교육시설의 설립
 - 도민들이 각종 재난을 직접 체험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선진형 안전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현장 맞춤형 재난안전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해상안전체험센터 설립 및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통해 각종 재난에 대응한 역량 강화

3) 핵심 프로젝트

◈ 위험요소에 대응한 친환경적, 안전한 공간관리 강화

- 공간적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에 대응한 도시공간 안전관리체계 강화
 - 주요 도시공간환경 정책수요로는 탄소배출, 기후위험, 기후적응이 있으며, 이에 대응해 기후안전 기반시설, 안전구역제 등 도시공간 안전관리체계 강화
 - 특히, 농어촌 풍수해 사전 피해 경감을 위한 예방 투자, 이상기후 대비 사회안전망 확충 지속, 각종 발전소의 대기영향 및 상생전략 마련
- 방재 국토도시 및 환경계획 수립 시행으로 기후 위기와 환경재해 등에 사전 대응
 - 재해위험지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구조적, 비구조적 예방사업 추진
 - 기후재난 및 위험관리에 필요한 공간환경 관리 강화
 - 기후 안전 및 방재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 수립
- 노후 사회기반시설 기후 리스크 및 국토 회복탄력성 관리 강화
 -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기후위험 평가 및 성능 검토, 보수·보강 방안 마련
 - 지하시설물 통합안전 관리체계 구축
- 도민의 생존과 산업에 영향을 저감·관리할 수 있는 산업 및 지구 도입
 - 재난리스크와 피해를 저감·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으로 기업·산업 경쟁력 강화
 - 특히 기후변화 리스크 혹은 이상기상에 대응한 새로운 재난안전사업 기반 마련
 - 타 지역과 함께 권역별(호남권) 및 남해안남부권 대기환경연구소 구축 및 운영
-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정책 정착으로 재난 악순환 차단 및 신속한 대응력 확보
 - 재난관리를 비롯한 생물자원, 감염병, 식량 확보 등을 위한 과학기술수요 급증 예상
 - 폭염, 집중호우, 태풍, 지진 등 돌발 재난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 특히 극한 강우에 따른 침수대응력 강화, 내진 설계를 통한 안전성 확보

◈ 도민체감형 포용적 안전서비스체계 구축

- ‘안전(기본)권’ 확보로 도민 누구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 보장
 - 재난안전사고 유형별 안전대책 수립, 민·관의 선제적 예방활동 추진, 재난·안전 사고 대응역량 강화, 재난안전체험교육 시설 확충 및 활성화, 신속한 재난대응 및 피해복구 추진 등 5대 역점과제 추진
 - 가정, 공장, 도로, 야외 등 일상생활 속 안전 위협요인 저감을 통한 생활밀착형 도민 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피해를 예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 미세먼지, 화학물질 등 위해요인의 획기적 저감과 안전관리를 통해 도민건강 보호
- 호남권 및 남해안남중권 초미세먼지 발생과 흐름에 관련된 공동연구 수행
- 재난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전정의 구현
- 재난안전 정책, 관리적 측면에서 다각적 협력네트워크 강화
 - 부처 간 연계·협력을 통해 도민이 공감하는 재난안전 서비스 확대
 - 재난 관련 공동 연구개발 추진, 재난 관련 현안의 효과적 대응력 강화 방안 마련
- 도민 스스로 재난 위험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참여 확대
 - 재난안전 교육 세분화 및 재난안전 관련 리빙랩 등 주민참여 방식 확대
 - 공공데이터, 유관 기관 가공데이터, 도민참여 데이터 기반 빅데이터 재난정보 양방향 플랫폼 개발
- 재난 후 물리적 복구 이외에 도민 심리안정 지원 서비스 확대
 - 재난 유형별 피해 규모별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 일상 복귀를 위한 재정 및 심리지원 서비스 강화

📍 스마트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개발·확대

- 재난안전관리 기술 기반의 재난관리체계 구축
 - 스마트 지속가능도시(Smart Sustainable City)와 연계한 재난관리체계 구축
 - 도시 안전 신진대사(Urban Safety Metabolism) 계획·관리기법 적용
 - 도시안전 측정·모니터링 기술로 대기, 폭염, 집중호우 등의 실시간 변화탐지 및 대응체계 구축
- 치수, 이수, 환경을 고려한 스마트 하천관리 체계 구축
 - 수문자동화, 자동수위계, 드론 활용 하천측량, 피해확인 등 스마트 기반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 고층 아파트 산업단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대책 강화
 - 도내 50층 고층 건물이나 이동인구가 많은 복합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대책 강화
 - 산업단지, 유통물류센터 등 대규모 구조물에 대한 폭발, 화재에 대한 소방대응력 강화
-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CT 기반의 스마트 재난관리체계 구축
 - 지역특화 산업과 첨단기술 융합 및 R&D, 실증테스트베드, 창업 지원 등을 위한 국가재난안전산업육성 거점 조성
- 기후환경 위험 주요 발생원과 피해 예상지역 모니터링 지속
 -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 폭염, 한파 등 도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환경 위험 요인 모니터링 강화
 - 스마트 도시와의 연계를 위해 기후환경, 재난 분야 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IOT 기반 환경안전센터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